


Free Market, Free Enterprise, Free Competition \_ since 1961

전경련 *ANNUAL REPORT*  
사업보고서 2009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ANNUAL REPORT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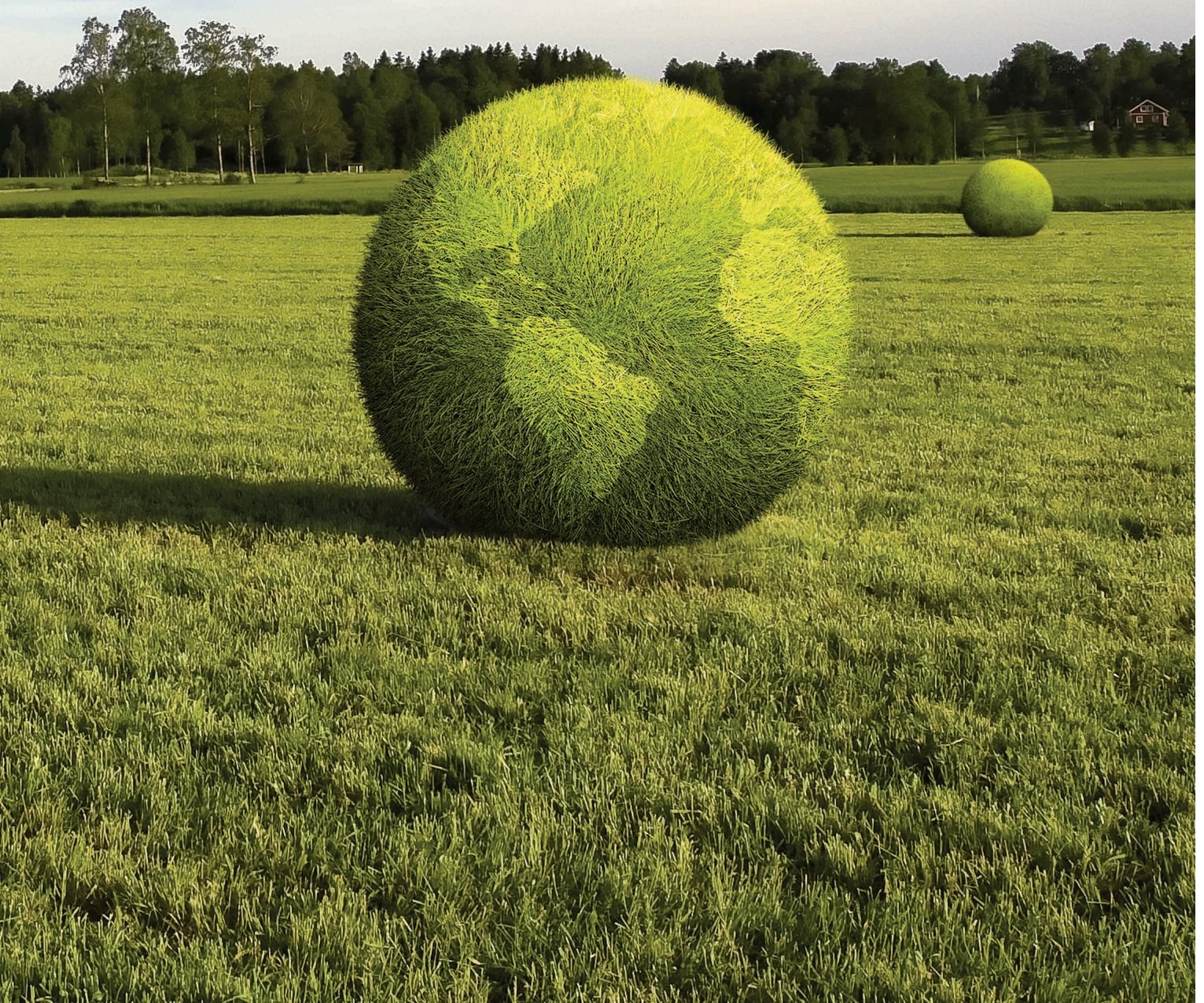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Contents

---

- 04 사진으로 본 2009 FKI Activities
- 08 제1장 2009년도 중점사업 추진실적
- 16 제2장 부문별 중점사업 내용
- 18 1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26 2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 36 3 기업경영환경 개선
- 48 4 시장경제 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 56 5 민간경제협력 강화 및 기업의 해외경영활동 지원
- 66 6 회관신축 및 회원사 모임 활성화



## 사진으로 본 2009 FKI Activities

- ①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1.29)
- ② 비상경제대책반 제1차 회의(2.17)
- ③ 제48회 정기총회(2.19)
- ④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경제6단체장 기자회견(2.24)
- ⑤ G20 비즈니스 서밋 참석(3.18)
- ⑥ 국방부에 시장경제대상 도서 전달(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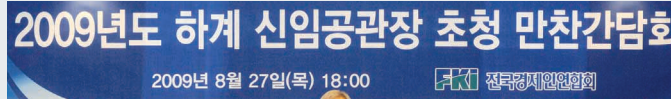


- ⑦ 하노버 산업 박람회(4.18)
- ⑧ 카자흐스탄에 경제사절단 파견(5.13~15)
- ⑨ 상생협력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 선포식(5.21)
- ⑩ 경제5단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6.11)
- ⑪ WEF 동아시아포럼(6.18~19)
- ⑫ 제5차 한중재계회의(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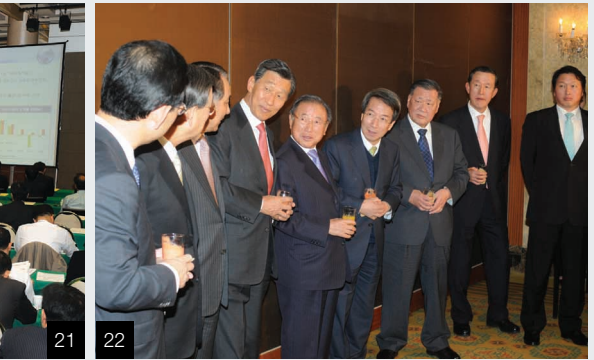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본 2009 FKI Activities

- 1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5단체장 공동기자회견(7.2)
- 14 2009 제주 하계포럼(7.29~8.1)
- 15 오산시 경제계보육시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8.25)
- 16 2009년 하계 신임 재외공관장 초청 간담회(8.27)
- 17 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9.25)
- 18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희망의 송편 빚기 CEO 봉사활동(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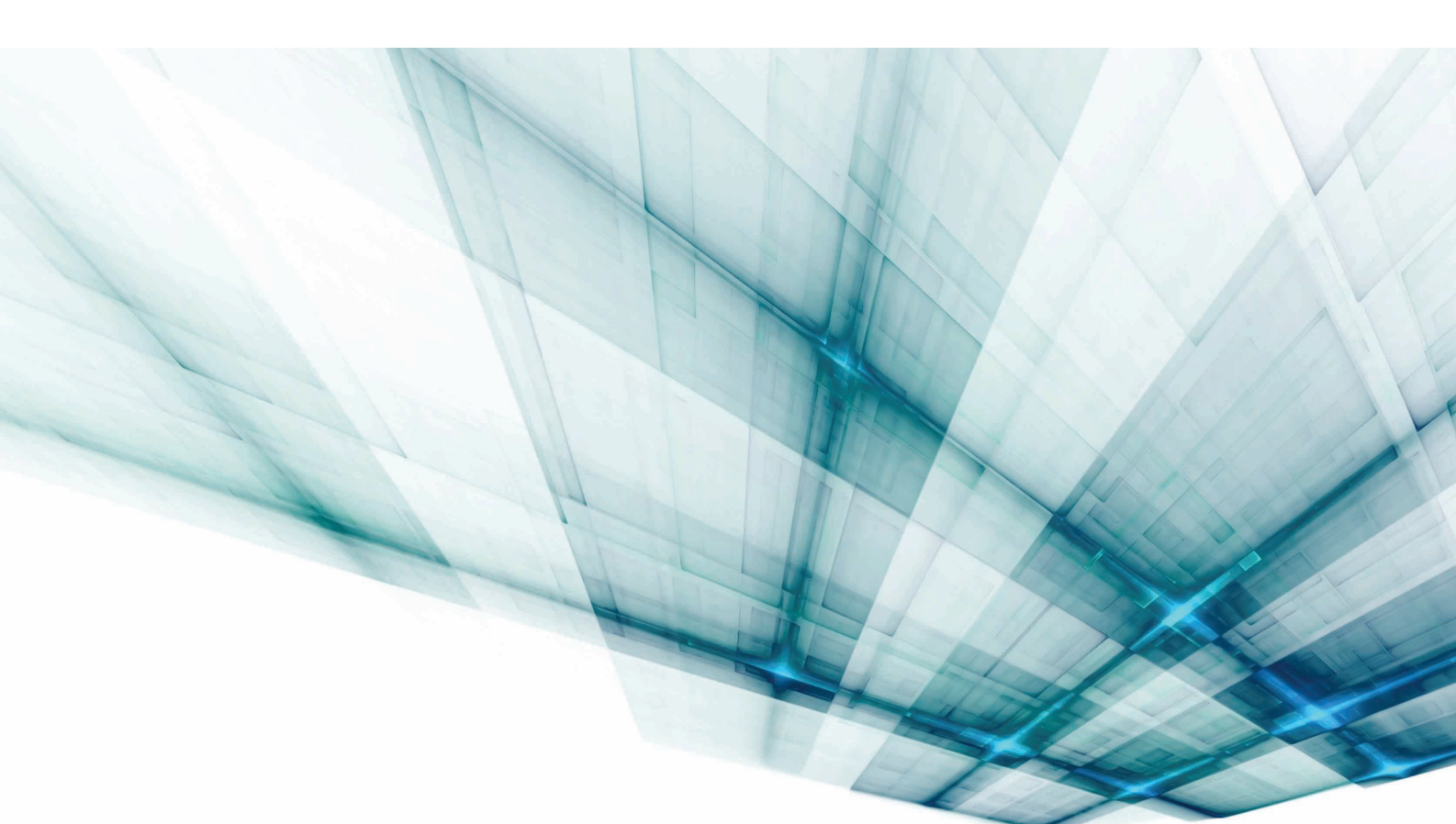


- ⑩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10.10)
- ⑪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10.21)
- ⑫ 2010년 경제전망 세미나(11.12)
- ⑬ 정운찬 국무총리 초청 회장단 간담회(11.17)
- ⑭ 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12.9)
- ⑮ 제20회 시장경제대상 시상식(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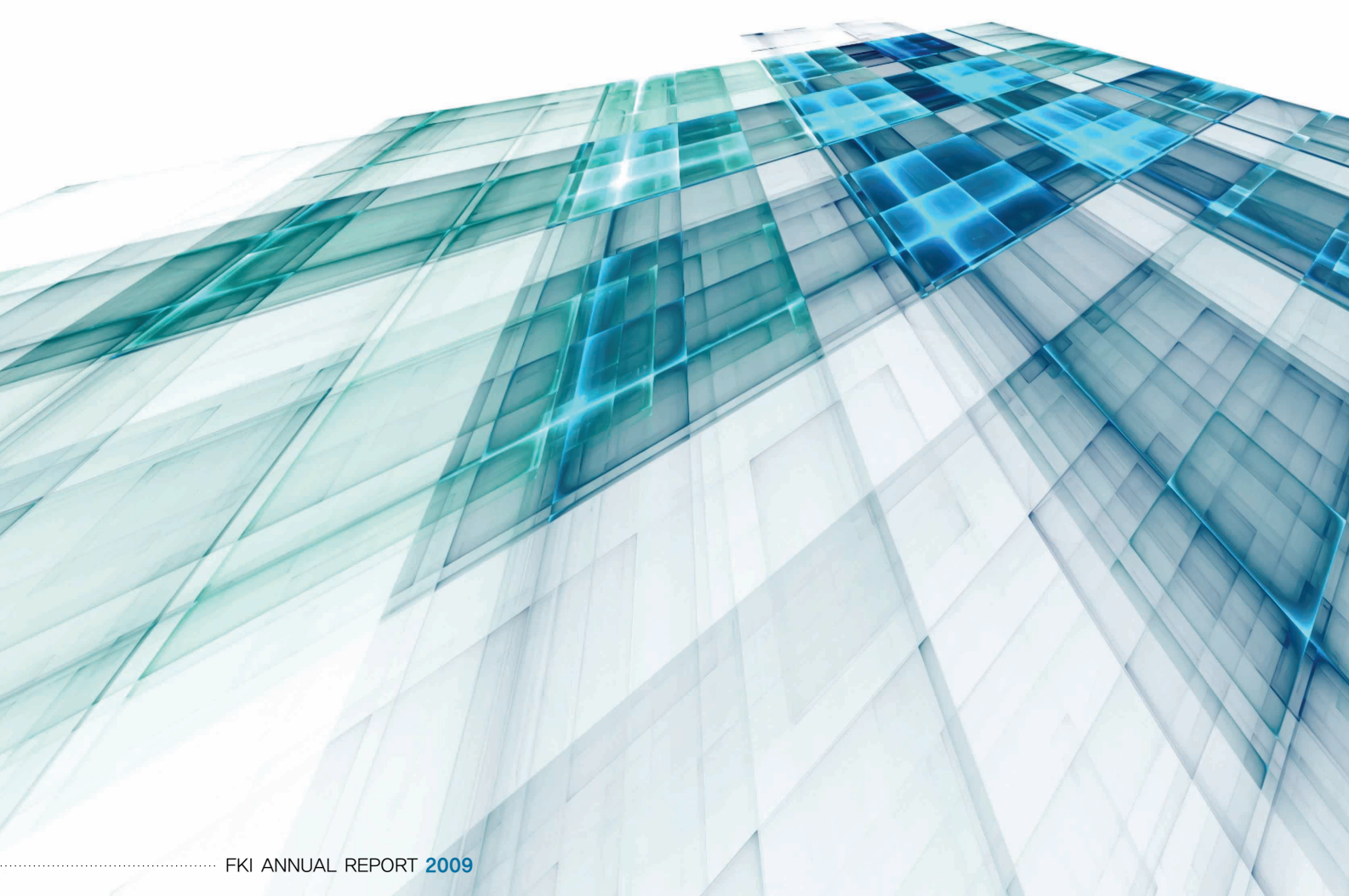


# 제1장 2009년도 중점사업 추진실적

---



.....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기업경쟁환경 개선, 시장경제 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경영활동 지원에 주력한 한 해였다.



2009년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 따른 가파른 경기침체, 급격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발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 노력과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으로 성장률이 1/4분기를 저점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글로벌 정책공조에 힘입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도 3월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



실물경제도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재고조정 효과 등에 따라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2009년 재정집행규모는 257.7조 원으로 2008년(219.9조 원)에 비해 17.2%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간 재정집행액의 65%인 167.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기회복시기를 앞당겼다.

2009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Delta 4.4\%$ 까지 떨어졌던 민간소비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과 3/4분기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연간으로는 0.2%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Delta 23.5\%$ 를 기록했던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3/4분기 이후 투자심리가 다소 호전되긴 했으나 연간으로는  $\Delta 8.9\%$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설비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문의 투자는 2009년 중 3%대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2009년에는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청년 인턴제 확대 등 11월까지 19.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2009년 전체적으로는 8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수요 및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2009년 수출액은 약 3,635억 달러(전년대비 13.9% 감소)로 글로벌 교역(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흐름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출 감소세보다 수입 감소세가 커지면서 무역수지도 404.5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sup>o</sup>
GDP	2.5	$\Delta 4.2$	$\Delta 2.2$	0.9	6.0	0.2
민간소비	0.5	$\Delta 4.4$	$\Delta 0.8$	$\Delta 0.8$	5.6	0.2
설비투자	$\Delta 2.0$	$\Delta 23.5$	$\Delta 15.9$	$\Delta 7.4$	12.9	$\Delta 8.9$
건설투자	$\Delta 2.7$	1.6	3.7	2.7	3.9	3.1
수출	13.6	$\Delta 25.2$	$\Delta 21.4$	$\Delta 17.6$	12.0	$\Delta 13.9$
수입	22.0	$\Delta 32.6$	$\Delta 35.7$	$\Delta 31.0$	1.4	$\Delta 25.8$
무역수지(10억 달러)	$\Delta 13$	2.9	16.5	9.9	11.7	40.4

※ 자료 : 한국은행, 관세청



전경련은 2009년중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장경제 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경영활동 지원에 주력하였다.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가 예상되었다. 전경련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경제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반을 구성해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등 정부부처와 긴밀히 정책공조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비상경제대책반 회의를 여섯 차례 열어 금융·세제, 산업지원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 11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환변동보험 재개,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47건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였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용대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을 발표(2.25)하였다. 또 대출초입 삭감과 기존 임직원 임금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채용과 인턴채용, 고용안정 등을 위해 사용하지는 경제계 결의를 이끌어냈다. 임금인하 방안으로 대출초입이 2,600만원을 넘는 기업에게 개별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초입을 최대 28%까지 차등 삭감하도록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을 추진하여 경제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국무총리실의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선정한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별로 관련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였다. 녹색기술산업 분야 18건 등 총 50건의 과

제를 건의하였으며, 이 중 24건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반영되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자율형 상시 기업재판, 기업도산법제, 경영권 방어수단 법제화를 건의해 기업도산법제를 개선하였고, 포이즌 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도록 하였다.

2009년에 정부가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 정책이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되도록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 규제 등 산업계에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서 보완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2020년) 목표 설정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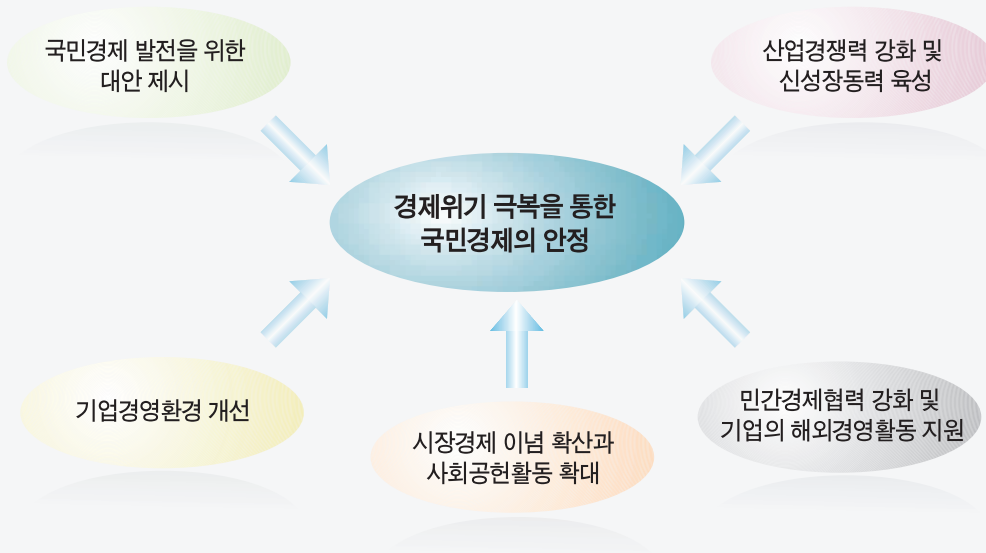
## 기업경영환경 개선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되게 하였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3월 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도권규제, 금산분리규제 등 주요 정책성 핵심개혁과제가 입법되고 관련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였다. 수도권 41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3조 4,430억 원의 공장설립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자연보전권역 후속조치 조기 완료, 연접제한규제 추가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2010년 6월 말까지 연접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환경규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해 은행 및 금융지주사 소유한도가 확대(4→9%)되고, 산업자본의 PEF 유한책임사원 출자한도가 확대(10→18%)되는 등 은행법(4.30)과 금융지주회사법(7.22)이 개정되었다.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포함된 노동조합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200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정신이 반영된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 정부·국회 설득작업 및 여론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복수노조는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활동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3,456만 명)의 10%인 약 35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통해 정부, 학계,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시장경제 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경제교육 인프라를 선진화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앞으로 도입되는 경제교과서에 적용할 집필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경제과목을 독립 교과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독립 교과목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이끌어냈다.

지상파 방송, 정부와 경제단체, 신문사 등과 공동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주역이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고양사업을 전개하였다. MBC와 공동으로 ‘한민족 위기극복 DNA : 기업가정신’이라는 7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학기간(8~9월)에 방영하였다. 또 기업가정신 주간(10.26~11.8)에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10.2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11.6) 등을 개최하여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산시켰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사업 등 경제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월 중 21개 주요 회원사가 참여하여 2009년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총 69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8월 24일 ‘오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착공식’을 필두로 11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경제협력 강화 및 기업의 해외경영활동 지원**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FTA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우선 G20 비즈니스 서밋(Summit)(3월), APEC CEO 서밋(11월)에 참가해 글로벌 경기부양 공조와 보호주의 확대 저지,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또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주요국과의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동남아 개별 국가와의 FTA 추진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FTA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전략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아세안, 인도 등 신흥개도국에 진출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전개하였다.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WEF 다보스포럼 기간에 국가브랜드 행사인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1.29)’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서울에서 ‘2009 WEF 동아시아포럼(WEF on East Asia 2009)’을 개최하여 한국경제와 기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브랜드 알리기 장’으로 활용하였다.

## 회관 철거 및 신축

2008년 말까지 입주사가 모두 이전하고 2009년 1월 중순에 전경련 사무국이 인근 KT빌딩으로 이전함으로써 구회관 철거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철거공사는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2월 말 기준 구조물 철거는 약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상층 철거과정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이 대량 나와 이를 제철소 등에 직접 매각하여 24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신축회관 설계는 세계 우수 설계업체들을 대상으로 초고층 오피스 설계 경험과 디자인 경향 등을 검토한 후 4월 Adrian Smith & Gordon Gill(ASGG)사를 선정하고 국내 설계사는 창조건축을 선정하여 계획설계는 9월 말까지, 기본설계는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구회관 철거, 신축회관 설계와 함께 인허가 준비도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교통부문에서는 건물신축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 환경부문에서는 탄소발생량 감축대책, 건축부문에서는 공개공지 개념을 살린 조경설계 등을 보완하였다.

## 회원사 의견 수렴 및 모임 활성화

2009년 한 해 동안 20개사가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원사가 총 484개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여러 회원사의 니즈(needs)에 맞게 의견 수렴과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다섯 차례의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의 자금애로 해소 방안, 복수노조·전임자문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고 경제정책위원회, 자원·에너지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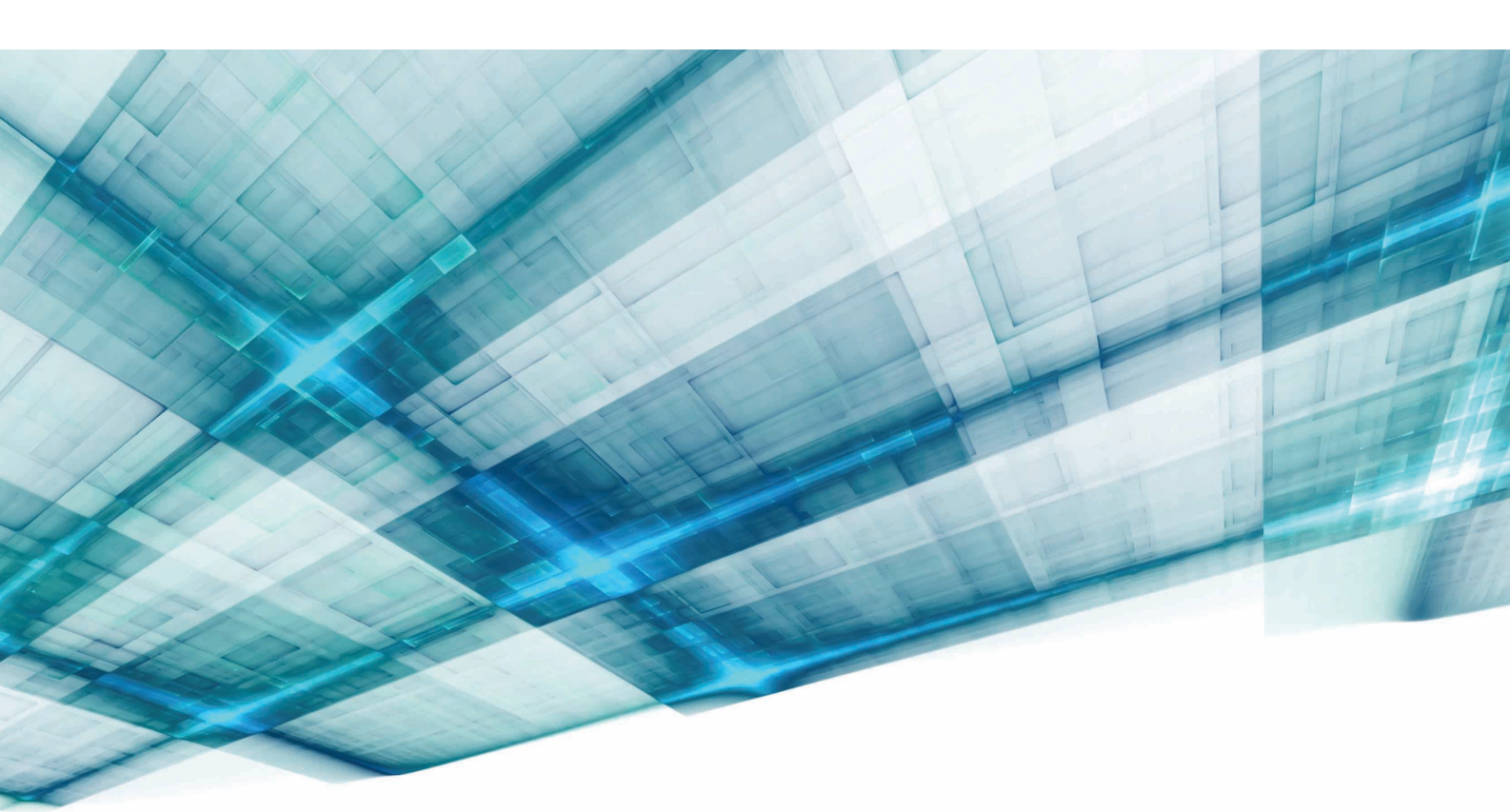
주요 그룹 경영전략본부장 간담회, 회원사 임원협의회, 기업경영협의회를 활성화해 회원사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경제계 의견을 정책담당자에게 전달해 정책입안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회직별(이사), 업종별(건설·조선·해운), 일반회원, 신규회원사 대표 초청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영 애로를 수렴하고 전경련의 사업 추진내용을 피드백하는 등 회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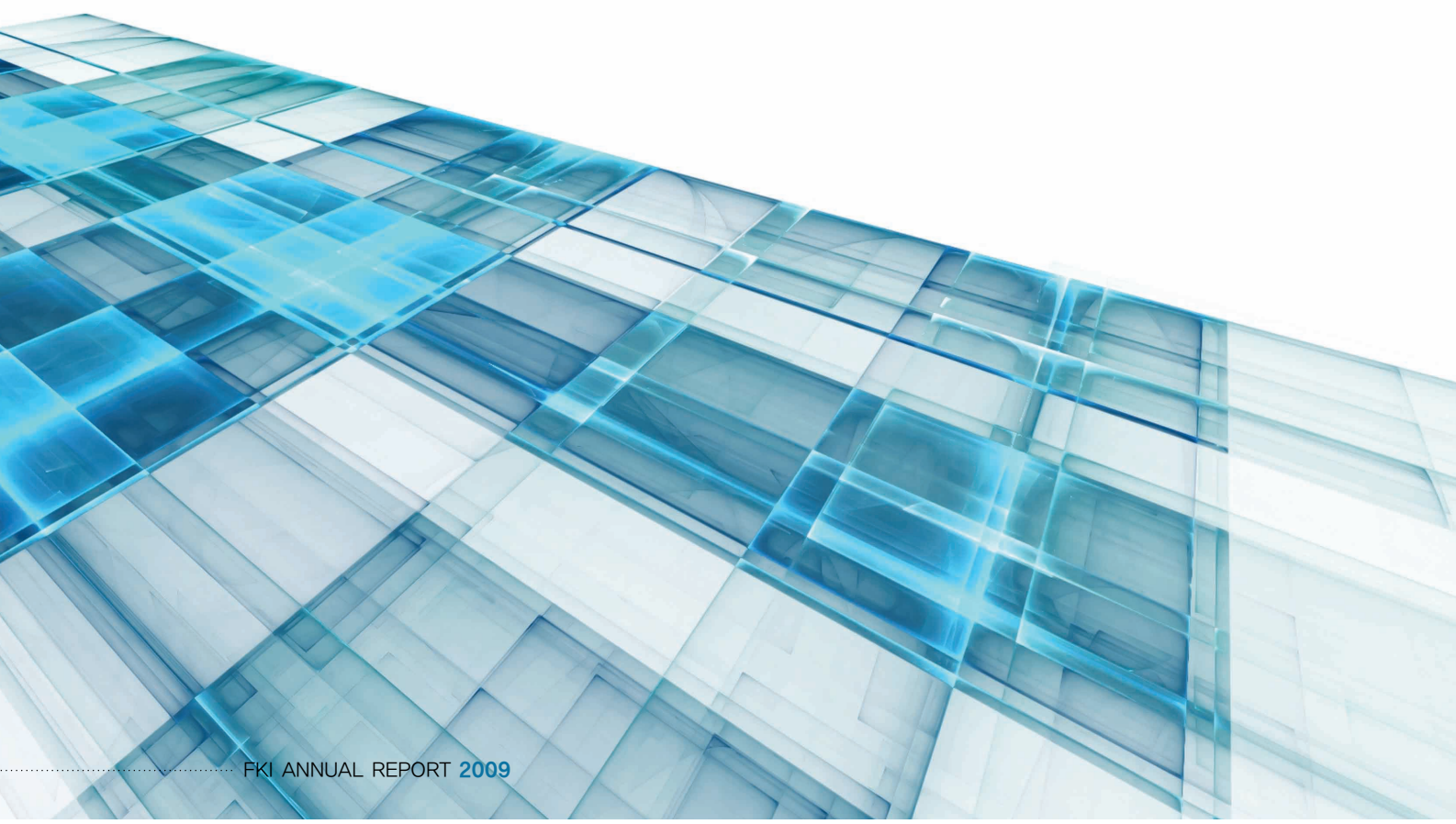


제2장 부문별 중점사업 내용

---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2009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칫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었으나, 정부의 선제적 재정운용과 기업들의 효율적 대처로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탈피하였다. 전경련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 1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1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급속히 확산되며 2009년이 시작되었다. 내수와 수출은 이미 2008년 4/4분기부터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연초에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제심리는 얼어붙었고 우리 경제는 위기설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상황을 선언하면서 위기대응 정책을 추진하였고, 기업들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였다.

1월 회장단회의 결의에 따라 20대 그룹 재무·기획·노무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경제계 차원의 비상경제대책반을 구성하였다. 비상경제대책반은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등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실물·금융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다. 상반기에 정책당국자 등을 초청하여 전체회의를 여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금융·세제, 산업지원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 11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위기극복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건의한 내용 가운데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환변동보험 재개, 국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47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께 20대 그룹의 1/4분기와 2/4분기 경영실적,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 기업현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 비상경제대책반 운용, 경제현안 대응과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주력

한편, 수출활성화와 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하여 원화 및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자금조달과 수출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지원, 보증 및 보험 등을 확대해달라고 관계당국과 금융권에 요청하였다. 연초에는 기업들의 수출입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외환부족으로 시중은행의 수출환어음 할인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수입 유전스(usance) 개설은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수출환변동보험도 중단되었다. 이에 정책당국에 국책은행을 통해 외환

#### 비상경제대책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초청자	주 제
1차	2.17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운영계획 보고, 600대 기업 투자계획 보고, 그룹별 현안 논의
2차	3. 4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정부의 대응방안, 그룹별 현안 논의
3차	3.26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방향, 그룹별 현안 및 애로 건의
4차	4.14	안현호 지경부 산업경제실장	정부의 산업정책방향 청취, 업종별 현안 애로 발표 및 논의
5차	5.19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그룹별 현안 논의
6차	6.24	-	주요 그룹 투자 및 고용 동향, 제3차 민관합동회의의 관련 논의





하반기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건의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재정의 역할 확대, 시중 유동성 공급 원활화, 안정적인 환율 관리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개선, 물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스포츠 인프라 건설 규제 완화, 부담금 경감, 연구개발투자 촉진,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합한 제도정비	멕시코, 태국,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 체결 가속화,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통합도산법 개정,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금융을 원활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중견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허용, 외화대출 당시 적용환율로 동일한 여신한도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선진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개선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기금을 늘려 수출환변동보험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밖에 비상경제대책반을 통해 선박제작 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수출입금융용 외화유동성 공급(50억 달러)을 확대하고, 4월 하순부터 수출환변동보험을 재개하였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용 예산도 증액하였다.

### 수출입 금융 확대, 추경편성 등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건의

동유럽 경제위기설, 3월 위기설 등으로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확장적 경제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28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연간 재정규모의 65%를 조기 집행하였다. 이와 함께 거시정책 운용방향, 투자 활성화, 기업정책, 기업금융, 세제, 노동시장 등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부문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 30대 그룹의 투자실적 및 계획,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R&D 비용 세액공제를 인상, R&D 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2012년까지) 등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바이오·연료전지 등 저탄소 녹색투자 지원 확대 등 기업투자 촉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개별기업 차원에서 발표한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투자 지원 등의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 민관합동회의, 지역투자박람회 개최 등으로 기업투자환경 개선 성과

7월 초에는 지식경제부,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그동안 경제계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스포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 수익시설의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경기장 임대기간을 연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출구전략 시행 논란이 가열되었다. 이에 경제전문가, 600대 기업,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경기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출구전략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여론을 선도해나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자들과 수시로 만나 경제현안의 해법을 모색하였다. 연중 경제정책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부의 주요 정책당국자들을 초청해 금융정책, 경쟁력 강화방안, 거시경제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감세정책, 규제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였다. 한편,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단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경제와 기업의 건전한 펀더멘탈과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을 소개하였다.

## 2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에 대응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신용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20대 그룹 방문조사 등을 실시해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에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경제정책위원회 개최 현황

일시	초청인사	주제	건의
1차(4.29)	금융감독원장	금융정책	중소기업 대출완화 등 5건
2차(6.29)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정책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등 10건
3차(7.3)	금융위원장	금융정책	금융산업 사전 규제완화 등 5건
4차(10.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경쟁력 강화	정부정책 감세기조 등 4건
5차(10.21)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정책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등 3건
6차(11.13)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정책	카드텔 심사 관련 건의 등 3건

기업자금난 해소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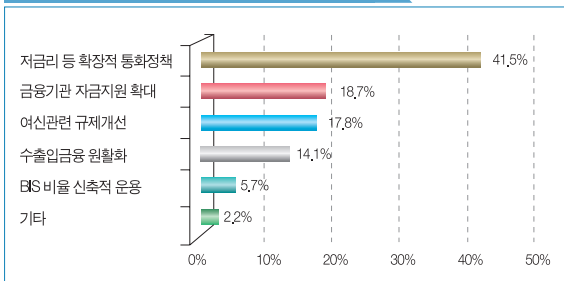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첫째,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완화하고, 중견 대기업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둘째, 기업의 주요 직접금융 수단인 회사채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회사채 매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의 매입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셋째, 회사채 발행금액, 금리, 시기 등 발행 세부사항을 실무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사채 발행 시 국내 기관투자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넷째, 수출입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기금 확충, 환변동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수출업체의 수출금융 환가료율 인하, 수출경쟁력 강화펀드 신설 등을 요청하였다.

이 밖에 외화대출 당시 환율로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 폐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채권시장안정펀드의 BBB급 회사채 매입 확대,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자본금 확충, 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확대 허용 등이 정책에 반영되어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기준 개선 촉구

금융당국의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및 약정체결 추진정책에 대응하여 환율상승 등 대외요인을 고려하고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였다. 2008년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기업의 외화환산 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 평가의 주요 항목인 부채비율이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크게 상승한 점을 지적하고, 업종 특성상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일시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 부채비율 중심의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산성, 향후 전망 등 기업의 미래가치와 경쟁력 등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그 결과 건의가 수용되어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에서 불합격한 14개사 중 5개사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이 유예(6.1)되었다. 금융당국은 9월 중순 향후 부채비율 중심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미래 현금흐름, 경영자 능력,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정책과제



※ 자료 : 전경련, 600대 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결과(2009.11)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기별 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전문가 대상 환율 전망 및 환헤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겪는 최대 애로사항은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곤란, 환리스크 관리 및 매출채권 회수 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저금리 등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정부의 금융기관 자금지원 확대, 여신규제 완화, 환율 급변동 완화를 위한 통화당국의 제한적 시장개입 등 정책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2차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위기 진앙지인 미국의 경제현황,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동유럽 국가들의 외환수급 실태 등을 조사하여 위기가 재발할 확률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반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등에 대한 사전신고의무 개선, 금융산업 진입관련 부채비율기준 완화, 금융기관의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요건 완화 등 금융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사내유보금 논란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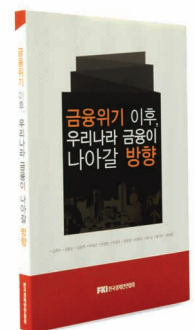
한편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주장에 대응해,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니며 기업은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을 설비투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 칼럼 기고, 언론 인터뷰, 보고서 발간 등을 활용해 적극 알렸다. 특히 사내유보금 중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통상 원재료·부품 구입, 재고 관리, 인건비 지급, 차입금 상환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매출부진과 시중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들로서는 생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은 대내외 경제여건, 배당정책, 자금조달 여건, 재무구조, 설비투자 규모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기업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사내유보금을 사용할 경우 기업 전체의 재무리스크가 확대되어 기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위한 출구전략 방안 제시

11월에는 정부 및 민간 고위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전략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유로 등 주요 선진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구전략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특히 하반기 국내경기의 회복세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복원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환율효과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12월에는 한국금융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발간하였다. 보고서 발간에는 금융제도자문위원회 소속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보고서에는 금융위기 현황과 한국의 정책대응, 금융위기 극복 이후 과제,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편, 외환 및 통화정책, 국제금융시장의 경쟁과 금융시장·산업 선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 만에 다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취약했던 이유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3 경제계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 국내 고용시장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실제로 2008년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했고, 2009년 신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나왔다.

전정련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고용대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노동계와 경영계, 민간, 정부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2.23)하고, 노동계는 파업 자제와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 실천,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기존 고용수준 유지 등에 합의하였다.

노·사·민·정 합의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경제계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제계 대책’을 발표(2.25)하였다. 대졸초임을 삭감하고 기존 임직원의 임금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여 신규채용과 인턴채용, 고용안정에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졸초임이 2,600만 원을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 실정을 감안해 대졸초임을 최대 28%까지 차등 삭감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을 추진하였다.

경제계의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사업에 동참한 주요 그룹들은 대졸초임 삭감과 임원 임금·성과급 자진 반납·삭감, 기존 근로자 임금동결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턴 및 신규 채용 확대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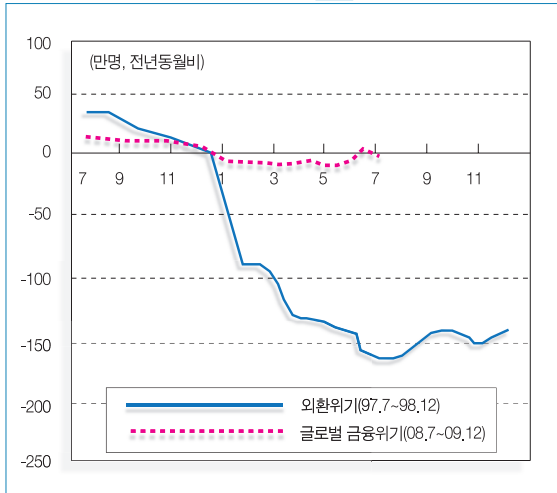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에 따라 30대 그룹의 2009년 중 신규채용 계획은 연초 계획한 5만 5,558명보다 1만 7,305명

주요 그룹 일자리 지키기·나누기 노력사항

주요 그룹	임원	근로자	대졸초임
A	임원 연봉 20% 삭감 실적별 지급인 초과이익분배금도 전무급 이상은 전액, 상무급은 30% 자진 반납	임금 동결	10~15% 삭감
B	전 계열사 임원 연봉 10% 삭감	과장급 이상 연봉 동결	5~10% 삭감
C	계열사 CEO를 포함한 임원 약 600명이 연봉의 10~20% 자진 반납, 성과급 반납 (약 100억 원 규모)	직원 연봉 동결 및 일부 관계사 연봉 반납	10% 삭감
D	임원 기본급 10~30% 삭감	임금 동결	5~10% 삭감
E	계열사 부상무 이상 전 임원 급여 10% 자진 삭감, 대표이사 이상 사장단 급여 20% 반납	임금 동결	20%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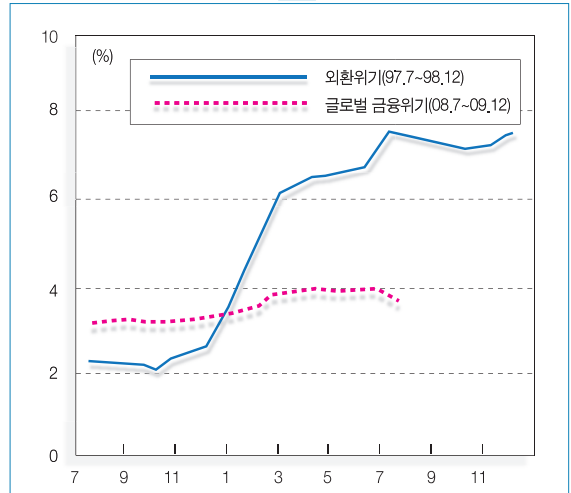


외환위기 때와 취업자 증감 비교



※ 자료: 통계청

외환위기 때와 실업률 비교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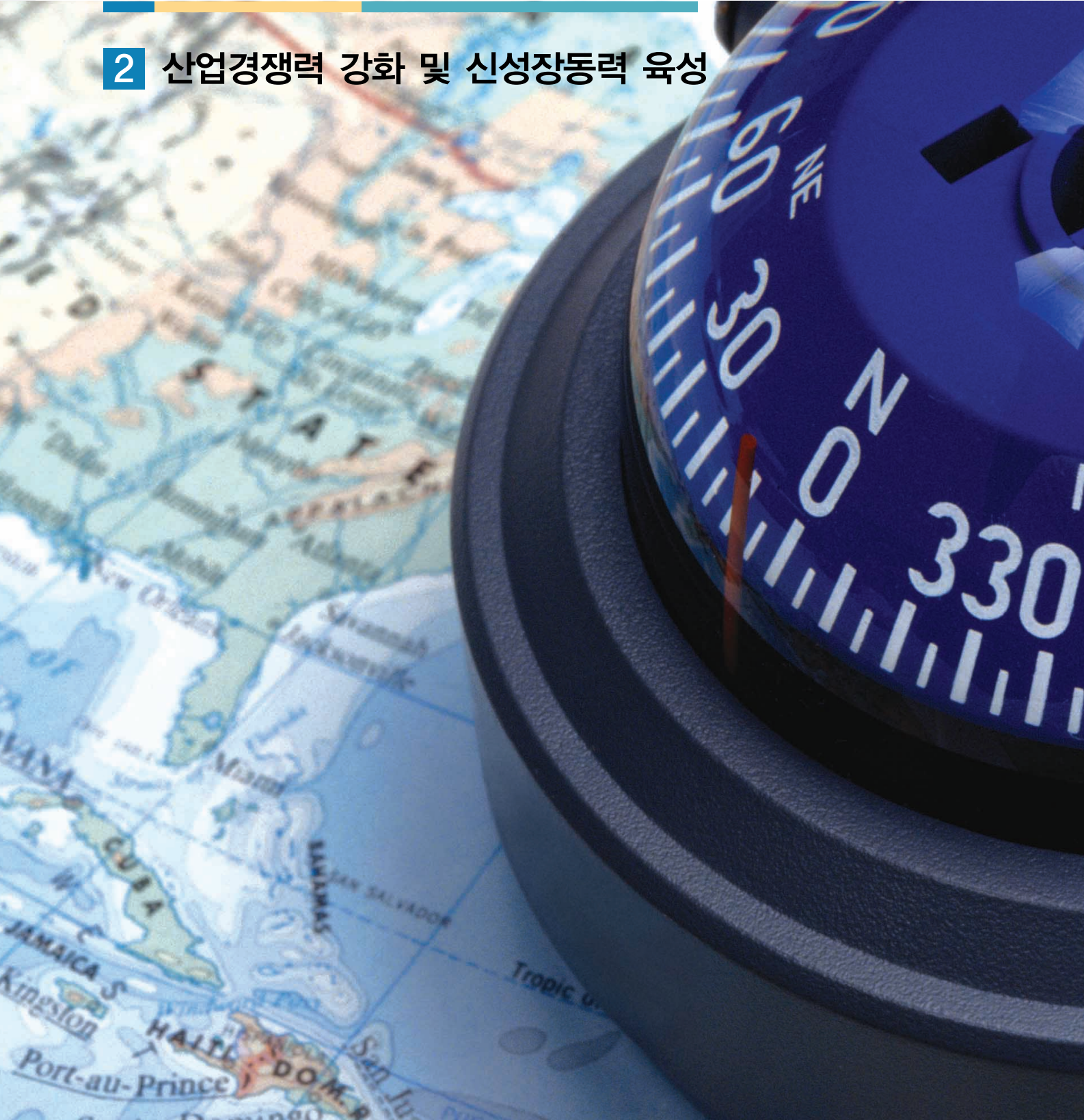
(31.2%) 늘어난 7만 2,863명으로 확대되었다. 신규채용 규모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불가피하게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30대 그룹의 총 근로자는 2008년 87만 9,448명에서 2009년 89만 3,117명으로 1.6% 증가하였다. 미국 GM 2만 1,000명, 독일 폭스바겐 1만 6,000명, 일본 닛산 2만 명, 소니 1만 6,000명, 파나소닉 1만 5,000명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계획을 발표한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해외언론이 주목하기도 했다. 2009년 연간 인턴 채용규모는 1만 4,934명으로 전년 대비 112.7%, 연초 계획치 9,996명보다 49.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제계의 노력으로 실업률이나 취업자 증감 등 고용지표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외환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1997.7~1998.12)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최대 감소폭은 159만 명(1998.8)이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22만 명(2009.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외환위기 때는 최고 8%(1998.12)까지 급증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2009.3)에 그쳤다.

국회, 일자리특별위원회 등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자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3,456만 명의 10% 수준인 약 35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선진국 수준의 인적자원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고용정책이 아니라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여성과 청년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 산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주요 유망산업별 현황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 2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



## 1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지원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을 지원하고 주요 유망산업별 현황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주요 산업별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기업R&D정책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온 회원사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R&D분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고, 국가 R&D 추진사업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대폭 개선하였다.

### 주요 산업별 발전전략 및 정책개선 과제, 신성장동력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건의

『FKI 전략산업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해 미래 유망산업별 현황과 발전전략,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풍력, 그린카, 그린IT, 바이오, 태양광 등 주요 산업별로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안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정책실현으로 이어졌다.

국무총리실의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개선 사업에 대응하여 정부가 선정한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별로 개선이 필요한 관련 규제를 파악하여 건의하였다. 녹색기술산업 분야 18건, 첨단융합산업 분야 15건,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17건 등 총 50건의 과제를 건의하였으며, 이 중 24건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반영되었다.

###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과제 건의

기업이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 요소인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R&D 투자 상위 20대 기업의 기술투자 관련 임원들로 구성된 '기업R&D정책협의회'를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ree Market • Free Enterprise • Free Competition



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과제 주요 반영내용	
과제 분야	주요 반영내용
녹색기술산업	발전용 연료전지 지원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제도개선, 친환경차 우선구매제도 확대, 클린디젤차 환경부담금 개선 등
첨단융합산업	정부주관 이동통신 품질측정제도 개선, IPTV 이용요금 신고제 전환, U-헬스 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 표시기준 개선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자연공원에 풍력, 태양광 설치 허용, 모바일 콘텐츠 심의절차 개선, 외국 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의료시설 포함 등

구성해 운영하였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모두 3회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기업 R&D 투자와 관련된 정책개선 과제들을 이끌어내었고, 정부 R&D 정책당국자와 의견교환을 위한 대화채널을 구축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와 기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과제들은 7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관련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3~6%에 불과했던 세액공제율을 20%까지 확대하고, 2009년 일몰 예정이던 R&D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였다. 그 밖에 기초원천기술이나 신성장분야의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대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때 현금 매칭비를 완화,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 정부출연기관의 개발기술에 대한 기업이전 활성화, R&D 전문연구요원 인력배정시기와 기업채용시기 일치 등 그동안 기업의 R&D 투자와 관련하여 논의한 정책개선 과제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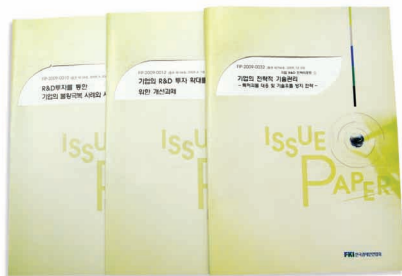
이와 함께 『기업 R&D 전략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해 기업의 R&D 투자와 관련한 각종 쟁점을 정리·발표하였다. 먼저 R&D 투자로 불황을 극복한 기업 사례를 제시하여 R&D 투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기술관리 차원에서 특허피플 관리와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건의,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참여**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건의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의제로 삼는 계기를 만들었다. 건의내용은 지식재산권 분야를 총괄하는 주도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특허사법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결취소소송의 항소심을 모두 특허법원 관할로 하며, 특허침해소송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변리사도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경험 및 능력을 기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 샘플 전산시스템을 기업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 심사비용과 등록비용 등 특허관납료를 낮추어 기업들의 특허관리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또 정부의 R&D 관련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장기



비전회의·산학연총연합회·과학기술종합체제회의, 지식경제부의 이공계발전전문가회의·지식융합발전 전략T/F·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2 기업 및 산업구조 재편 지원

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할 때 목적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다. 기업자율형 상시 기업재편, 기업도산법제,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단일회사법 등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전경련의 다양한 경쟁력 제고방안에 공감하여 포이즌 필을 입법예고하고 도산법제를 개선하였다.

### 기업재편 원활화 방안

지난 6월 24일 『일본 구조개혁 정책의 국내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기업재편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부실해져야만 구조조정을 추진하다보니 해당기업이 제값을 받기도 어렵고, 구조조정도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다. 이처럼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기업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만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 일본 산업재생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은 주무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장관이 승인하면 세제·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상법상 주주총회의 면제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제공한다. 이에

구분	주요 내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의 이연과 설비투자자산의 조기회수를 위해 특별상각(20~30%)</li> <li>등록면허세(2.8%~1.2% 등) 경감</li> <li>부동산취득세(3.0%~2.5% 등) 경감</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책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용자, 출자 혜택</li> <li>해외 자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LPS)의 해외 투자한도 제한(50%) 면제</li> <li>독립행정법인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li> </ul>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결합 심사기간이 30일에서 15일 또는 7일로 단축</li> </ul>
상법* (회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회사에 대해 3분의 2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의 조직재편행위에 대해 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면제</li> <li>현물출자 등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재산가격조사 면제</li> <li>주식병합 시 주주총회 결의 면제</li> </ul>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양도 시 1개월 내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li> </ul>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부실기업 위주의 시장퇴출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전체에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경영권 방어수단 입법화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위한 기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영권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주식대량 소유제한, 의무공개매수제 폐지, 외국인 주식투자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된 반면, 방어수단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밖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SK-소버린, 삼성물산-헤르메스, KT&G-칼아이칸, 포스코-아르셀로미탈 등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흡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보수적 자금운용에 따른 투자 활성화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경영권 보호장치를 법적으로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 지난 2월 『일본 적대적 M&A 법제의 글로벌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뒤 법무부·기재부 등에 이를 건의하였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당초 정부는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이즌 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지난 12월 1일 포이즌 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였는데, 포이즌 필 도입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이를 집행할 때에도 이사회와 특별결의(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포이즌 필 도입만으로도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측면에서 불 때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기업도산법제 개선

신규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느냐 여부는 성공적 기업회생의 관건인데도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퇴출대상으로 인식되어 제1금융권 등에서 신규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즉 신규 시설투자, R&D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자금과 사업만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기업회생에 성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신규자금 조달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미국 DIP (Debtor-in-possession) Financing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하였다. 미국은 DIP Financing을 활용해 신규자금 조달 지원이 가능(US Bankruptcy Code §364)하다. 채무자(DIP)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신규 조달자금은 변제 시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누린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생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신규 지원자금을 우선적 지위(super priority)를 인정해야 한다. 채무자의 성공적 회생에 필수적인 신규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미국

의 DIP Financing에 준하는 신규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 등에 건의하였고, 이를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회생가능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었다.

### 모범회사법 제정

현행 상법에 담긴 회사법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상당하고, 외국과 달리 회사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다.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의결권 제한규정은 우리 상법에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 포이즌 필과 같이 선진 각국이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은 상법에 전혀 도입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단일 회사법제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 상법은 총론, 회사, 보험, 운송 등의 내용이 모두 혼재되었다. 이로써 상법은 분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고, 5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급변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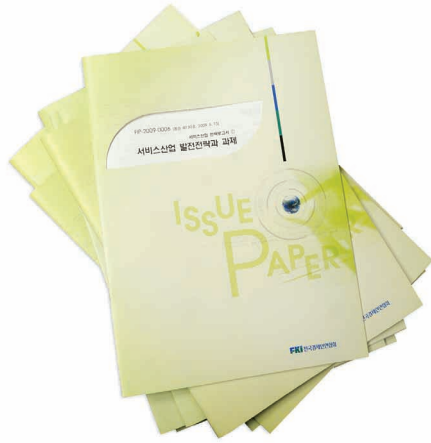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회사법제의 선진화’, ‘회사법의 단행법화’, ‘이해관계 규율의 자율성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모범회사법』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특히 사업재편을 원활화하기 위해 현행 상법의 일부 규정을 개선하였다. 사업재편은 기업의 존속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그런데도 현행 상법은 사업재편에 대해 외국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소규모 합병(합병하는 회사의 주식가액 대비 5% 이하의 작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면제하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모범회사법’에서는 외국 입법례에 따라 소규모 합병 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2008년 하반기에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2009년 초에도 계속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 전경련은 위기극복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서비스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지향적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위기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해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각종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데다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국민경제 내 비중과 생산성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사업구조도 대부분 영세하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분야	정책 과제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립 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활성화</li> <li>• 관광숙박업·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보유세 제조업 수준 감면</li> </ul>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병원 허용을 통한 투자 확대</li> <li>•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전문인력 양성, 분쟁시스템 마련)</li> <li>• U-헬스 활성화 지원(원격의료범위 확대, 정부투자 확대)</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대학 국내유치 활성화(과실승금 허용 등)</li> <li>• 교육정보 공개 활성화(진학률, 취업률, 학교평가 결과)</li> </ul>
문화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투자 활성화(전용기금 신설, 완성보증제 활성화), 지적권 보호 강화</li> <li>• 수출활성화 지원(수출보험 확대, 컨설팅 제공, 수출펀드 조성)</li> </ul>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유통시설 입지 제한 완화</li> <li>• 영업규제 완화(서틀버스 운행 허용 등)</li> </ul>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디자인 안목 제고 및 인하우스 투자 활성화 지원</li> <li>• 우수인력 양성(특성화 대학, 기업맞춤형 교육 지원 등)</li> </ul>



### 서비스 산업 현황 및 분야별 발전전략, 정책개선 과제 제시

서비스 산업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과 관광·의료·교육·IT서비스·유통 등 분야별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같은 과제들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대토론회'와 '제3차 민관합동회의' 등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먼저 관광분야는 관광산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의 정책개선 과제를 관련부처에 건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북아 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즈오카 노선, 김포-하네다 셔틀노선 등 한중일 항공노선을 대폭 증편하였다. 제조업 공장에 비해 높은 비율을 적용받던 관광숙박업의 건물재산세 용도지수와 가산율도 완화하고, 관광호텔의 옥외음식점 영업을 허용되어 관광호텔업계의 수익사업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 밖에 관광숙박업 소유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율이 완화되고 회원제 골프장의 종합부동산세율 및 재산세율 인하, 수도권 내 골프장 입지제한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 제4차 한일관광협력회의에서 한일 관광현안 논의

한편, 2006년 시작한 한일관광협력회의 제4차 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양국의 관광산업 관련 경제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한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경제계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 한일관광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상품 개발, 한일 양국과 제3지역의 관광시장 확대방안 등 한일 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양국의 관광수요 촉진방안으로 서머타임제 도입을 통한 관광레저 수요촉진, 의료관광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일 경제계는 공동으로 양국 정부에 서머타임제의 동시 실시를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전경련도 경제5

단체 공동으로 서머타임제의 조기 실시를 건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일 양국 기업 간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재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관광통계 기준과 조사방법을 통일해 상호 이용을 촉진하며, 신종플루 등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보공유, 안전대책 마련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IT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및 정책개선 과제 제시

『IT서비스 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IT서비스 산업 발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업계의 건의과제들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를 위해 IT서비스 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조업 위주인 국내 IT산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성장전략을 제안하였다. IT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으로 표준화를 활용한 지식산업화, 글로벌화,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따른 융·복합화, IT컨설팅·개발·솔루션을 통합하는 종합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 IT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쟁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헤드카운팅 방식 대신 기술별로 점수를 매겨 가격을 책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발주자와 시스템통합업체의 책임소재를 명문화하였다. 해외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 발주 IT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며, 그 밖에 Green IT, u-Health 등 신사업분야를 표준화하여 선제적 시장진출, 융·복합 IT분야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중 발주자와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평가방식 확산, 원격작업 허용 등은 검토 중이다.

#### 교육·문화 산업 관련 행사 추진과 정부위원회 참여

교육과학기술부, 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미래인재포럼'을 운영하고, 총 6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이공계 인재육성 전략, 녹색성장시대의 녹색인재 육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교육, 등록금 부담 경감방안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 다양한 인재육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위원회, 마이스터고 지원 정책위원회, 고등교육 장기발전방안 회의,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심사회의 등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산업계의 수요와 유리된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커리큘럼 과정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국제문화교류재단과 공동으로 2009한류포럼을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있는 한류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범 실시 중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확대·적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제안하였다.

## 4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대응

### 녹색성장기본법 대응

2009년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설정 등 경제구조를 녹색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 입법 초안(2009.1.15 입법예고)에는 온실가스 배출총량 규제, 에너지 시장의 위법한 이익 환수,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중복 규제 등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하면 설비 증설과 경기변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져 기업의 신규투자를 저해하고 원가를 상승시키며 해외이전을 가속화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시장의 위법 이익 환수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정거래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등 기존 법령의 규제와 중복될 수 있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자동차 연비 규제와 온실가스 규제는 사실상 이중규제로 차량개발 및 생산관리, 시험·검증 등에 추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어 제조비용 상승 등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된다.

전경련은 국회, 정부, NGO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건의, 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였다. 기후변화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방문하여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2.13), 녹색위 김형국 위원장 초청 자원에너지위원회(10.6) 등을 개최해 정책관계자들에게 산업계 입장을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은 당초 4월에서 2009년 말까지 연기되었고, 산업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정부안은 국회에서 수정되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의 위법 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이중규제가 완화되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 및 반영사항

정부 초안(1.14)	업계 건의안	국회 최종안(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li> <li>• 정유사 위법 이익 환수</li> <li>• 매년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생산량·소비량 정보 보고</li> <li>• (자동차)온실가스 및 연비 2중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자율 감축 허용, 총량제한 시에도 국내외 여건 고려</li> <li>• 위법 이익 환수 조항 삭제</li> <li>• 최근 1년의 주요 내용 공개 가능</li> <li>• (자동차)온실가스 규제로 일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반영] 법조문에서 총량제한 조항 삭제, 다양한 방식 고려</li> <li>• [반영] 조항 삭제</li> <li>• [반영] 최근 1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보고</li> <li>• [반영] (자동차)제작사가 온실가스 또는 연비 규제 중 선택</li> </ul>



##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2020년)목표 대응사업도 추진하였다. 녹색위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BAU : Business As Usual)이 2005년(5억 9,000만 톤) 대비 37.8% 증가한 8억 1,300만 톤(연평균 2.2% 증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BAU 대비 21% 감축(2005년 대비 +8%), 27% 감축(2005년 수준 동결), 30% 감축(2005년 대비 △4%)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아직은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협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목표를 결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2009년 초부터 녹색위-산업계 협의회를 운영(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정유, 제지, 철강 7개 업종, 총 20회)하여 업종별 감축기술 및 BAU 전망을 검토하는 등 국가 감축목표 설정 작업 초기부터 정부 연구진과 공동 작업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축 잠재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 산업계 대책회의를 50여 회 개최하여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 목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공청회(9.9), 토론회(9.28~29) 등에서 정부·NGO 등이 주장하는 2005년 대비 감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하여 2005년 대비 총량 감축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BAU 대비 감축방식으로 목표를 전환할 수 있었다. 또 산업계 목표를 국가 목표(BAU 대비 30% 감축)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환경정책 방향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일괄 규제방식의 환경정책 방향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동안 국내 환경규제는 입지제한, 방지시설 설치의무, 연료제한, 농도 및 총량규제 등 사업장 설립에서 최종 폐기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에게 행정·관리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시켰다. 또 경제적·과학적 고려가 미흡한 환경규제는 국내 기업의 과도한 규제순응비용을 초래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불필요한 입지규제 개선, 과도한 환경 목표 및 규제기준 완화, 총량·농도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부담의 가중문제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이후 총리실과 공동 작업(3월~11월, 총 5회)을 거쳐 환경규제 개선방향은 개별 규제완화와 같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 아닌 성과기준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같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기업체감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기업경영환경 개선



##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기업체감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 금산분리규제 개선, 미디어관련법 개정 및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경쟁체제 도입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입법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시적 규제유예와 투자저해규제 개선, 법정부담금 경감 등을 위해 기업현장 중심으로 애로사례를 발굴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건의과제의 상당부분이 반영되거나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수도권규제, 금산분리, 특수관계인 등 핵심 개혁과제 입법화 성과

첫째, 수도권규제, 금산분리규제, 특수관계인규제 등 주요 정책성 핵심 개혁과제가 입법되고 관련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였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 41개 기업이 3조 4,430억 원에 달

규제개혁 관련 주요 건의내용 반영결과	
건의 과제	주요 반영내용
정책성 핵심규제 개혁 (수도권규제, 금산분리규제, 특수관계인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규제완화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1.16)</li> <li>- 2009년 말까지 수도권 환경규제 완화 방안 마련 : 하이닉스 공장증설 해결(환경부, '10.1.29)</li> <li>- 공장증설 등 연계제한 추가 개선방안을 2010년 6월까지 마련</li> </ul> </li> <li>• 금산분리 완화관련 은행법(4.30), 금융지주회사법(7.2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및 금융지주사 소유한도 확대(4→9%)</li> <li>- 산업자본의 PEF 유한책임사원 출자한도 확대(10→18%)</li> <li>- 기업집단계열사 PEF 출자한도 확대(30→36%)</li> </ul> </li> <li>※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 자회사 허용</li> <li>• 특수관계인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5.6) : 특수관계인 친족범위 축소(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혈족)</li> </ul> </li> </ul>
한시적 규제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지역(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 건폐율 20%→2년간 40%로 상향 조정</li> <li>• 국토계획법 제정(2003.1.1)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을 연접합산에서 2년간 제외</li> <li>•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는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연구소 증설 허용</li> </ul>
산업별 규제 개선 (미디어관련법, 방송광고판매업, 물류산업, 전력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방 경영 허용,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채널 30% 허용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7.22)</li> <li>• 전경련 건의취지인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 도입을 방통위의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의견에 반영(12.10)</li> <li>• 택배차량 주정차가능 지역 확대, 전문물류기업의 육성지원 강화, 창고업 등록제 변경 등 물류관련제도 개선</li> <li>• 발전소 건설 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총량규제 개선. 지경부는 2010년 전경련 건의안을 포함하여 발전시장 경쟁체제 전반 검토 예정</li> </ul>
투자저해 규제개혁 (135개 기업활동관련 과제, 경제자유구역·기업 도시·대규모 유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5개 기업활동 관련과제 :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범위 완화, 식용타르색소 규제완화 등 부처협의 완료과제(12월 말) 118건 중 74건 수용(반영률 62.7%)</li> <li>•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 전환,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20건 건의과제 중 8건 제도 개선</li> <li>• 기업도시 관련제도 :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 휴양콘도미니엄 분양특례,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등 6건 반영</li> <li>•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제도 :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 등 6건 반영</li> </ul>
법정부담금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차 국경위(6.24)에서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개혁방안' 보고 내용에 전경련 건의내용 다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제 도입, 중복부과 부담금 통·폐합 추진, 개발부담금 50% 감면(2008년 1,266억 원 징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수질개선부담금 요율 2,200원으로 단일화</li> </ul> </li> </ul>

하는 공장설립투자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수도권 규제개혁이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 규제완화조치의 투자실효성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법령개선의 조기 완료, 연접제한규제의 추가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 등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증설의 허용 등 연접제한규제 개선 방안을 2010년 6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환경부는 하이닉스공장 증설이 가능하도록 무방류시설이 아니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낮추면 '특별대책지역 II 권역' 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대 제외) 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이 허용되도록 관련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10.1.29)

금산분리완화 관련법안의 일부인 은행소유규제 완화법안(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을 작성해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관련법안 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은행 및 금융지주사 소유한도가 확대(4→9%)되고, 산업자본의 PEF 유한책임사원 출자한도가 확대(10→18%)되는 등 은행법(4.30)과 금융지주회사법(7.22)이 개정되는 입법성과를 거두었다. 또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에서 과도하게 규제되는 주요 법률의 특수관계인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의과제를 일부 수용하여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가 축소(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혈족)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5.6)하였다.

#### 한시적 규제유예 특단조치로 기업투자효과 유발

둘째,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280개 규제를 유예하는 정부 방안이 발표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보전지역(보전·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 조정(20→40%), 2003년 연접개발규제 도입 이전 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면적의 연접합산 2년간 제외,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연구소 증설 허용 등 42개 건의과제 중 34건이 반영되었다.

#### '투자저해사례 30選' 등 기업활동 관련 135개 과제 중 64건 반영

셋째, 토지이용·공정거래·환경·안전 등 기업현장의 투자애로로 작용하는 25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실무검토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12개 분야 135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경위에 건의하였다. 이 중 '투자저해사례 30選'은 방송과 신문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투자를 가로막는 불량규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 범위 완화, 식용타르색소 규제완화 등 2009년 말 현재 총 135개 건의과제 중 74개(반영률 54.8%)가 반영되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대형 유통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건의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경위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였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추진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제도 관련 20개 건의

과제 중 8건이 개선되었다. 기업도시 관련 건의과제도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의 명확화 등 4건이 제4차 국경위에서 반영되었고,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대형 유통시설 관련제도의 경우도 제4~5차 국경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옥상간판 최저층수제한 완화 등 총 6개 안건이 반영되었다.

### 미디어관련 산업, 물류산업, 전력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넷째, 미디어관련 산업, 방송광고판매업, 물류산업, 전력산업, 중전기산업 등 주요 산업의 규제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경제계 입장을 제시하여 방송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3개 건의과제인 신방겸영 허용,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지분 10%, 종편 및 보도채널 30% 허용, IPTV의 종편 및 보도채널 49% 허용 중 2개가 수용되고 1개가 부분 수용되었다. 또 광고주가 바라는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미디어랩 도입방안을 제시하여 2009년 말까지 방송통신판매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방통위의 1사 1미디어랩 체제 발표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물류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총 39건의 물류관련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택배차량의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전문물류기업 육성지원 강화, 유가보조금 제도 연장, 창고업 등록제 변경 등 6건이 개선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만료와 함께 제기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의 발전시장 경쟁체제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 2010년 중 전경련의 건의방안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전기기제품의 개발시험 적체를 해소하고 국내 중전기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의 대전력시험설비 1기 증설에 필요한 1,500억 원의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한국전기연구원의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 KDI에서 추가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 예산에 1,500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대규모 유통시설 정책건의 반영성과	
부문	주요 반영내용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국고지원 확대, 개발·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R&D 센터, 다국적 기업 아태지역 본부 세제 혜택
기업도시	학교용지 경비부담기준 명확화, 휴양콘도미니엄 분양특례 마련, 기업도시 내 특목고 우선지정 근거 마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체별 구축
대규모 유통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축물 심의 시 건축주 의견반영절차 마련,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관련 허가·신고 의제개선, 공개공지 합리적 활용, 옥상간판 최저층수 제한 완화

### 일몰제 도입, 부담금 요율인하 등 정부 부담금 개혁 추진동력으로 작용

다섯째, 2008년의 법정준조세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2009년에도 환경 및 건설관련 부담금에 대한 회원사의 애로실태를 파악하여 국경위,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였다. 기재부는 제14차 국경위(6.24)에서 대통령에게 부담금 개혁방안을 보고하여 향후 부담금 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또 부담금 일몰제 도입, 중복부과 부담금의 통·폐합 추진, 개별 부담금 인하 등은 전경련의 건의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50% 감면(2008년 1,266억 원 징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수질개선부담금 요율 2,200원으로 단일화 등은 경제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 밖에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체감도 개선과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포상함으로써 정부와 규제개혁 추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과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 2009년 2월 조사 때 27.1%에서 2009년 8월 조사 때는 49.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선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해 '2009 규제개혁 우수 도우미 포상'을 공모하여 우수 사례 63건을 접수하였다. 이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과 이한구 의원(한나라당) 등 8개 부서와 개인을 수상자로 선정·포상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한편, 세종시 대안에 대한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방안에 대해 전경련 회원사 150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개선과제'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준공공부문 혁신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정부의 준공공부문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 2 친시장적 기업정책 유도

2009년에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기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고,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새로 도입된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지난 3월 3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86년부터 경제력집중 억제를 목표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출총제는 그동안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출총제를 폐지하기 위해 내세운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출총제는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기업의 신성장산업 진출을 저해한다. 최근 기업의 투자방식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회사 내 사업부를 신설하지 않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

황인데, 출자규제는 이러한 법인 설립 자체를 제한하였다. 특히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첨단산업 등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출자로 집중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데도 이를 규제함으로써 현대, 삼성전자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출현을 제약해왔다.

둘째, 출자규제에 따른 해외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으로 경영권 불안이 가중된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 대량소유제한, 의무공개매수제 폐지, 외국인 주식투자 절차 간소화 등 적대적 M&A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되어 국내기업은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어왔다. 반면, 기업경영권 경쟁시장에서 국내기업의 방어수단은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 계열사 주식취득(출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총 규제로 계열사 출자에 따른 우호세력 확보마저 어려웠다.

셋째, 출총제는 사전규제여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된다. 기업투자를 사전에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일본도 2002년 사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총제를 폐지하였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은 외국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출총제를 폐지하기 위해 전문가 기고 및 칼럼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대한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 현대 등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들과도 공조를 유지하며 정책건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국회의 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출총제 폐지의 당위성과 출총제의 폐해 등을 집중 설명하여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출총제 폐지에 따른 다양한 사후규제 방안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손해액의 세 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현재 공정위가 전속적으로 행하는 행위금지 등 시정조치 권한을 개인이 요청하도록 허용하는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등은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고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을 저지하였다.

## 지주회사 규제완화

엄격하게 유지된 지주회사 행위제한이 지주회사의 투자를 제한하고 지주회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인수위 시절부터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008년 7월 지주회사 일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4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러 정치일정, 국회과행과 겹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이후 동 규제완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 설득을 적극 추진하였다. 재계의 설득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주회사 규제완화로 일반기업집단, 외국기업, 금융지주회사와의 비교에서 겪고 있는 상대적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소유 금지, 비계열회사 투자 5% 제한, 부채비율 200% 제한 등 일반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고 지주회사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

나라만의 규제로 자유롭게 출자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동일한 지주회사인데도 금융지주회사의 일반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일반회사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투자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구조조정과 경영효율 등에 장점이 있는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지주회사는 구조조정 용이, 신규사업 진출 시 리스크 최소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역할 분담에 따른 효율성 제고 등 장점이 많고 특히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하향출자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해왔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법 개정 지연에 따른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증손회사 규제완화, 타 계열회사 주식소유제한 폐지 등 지주회사 투자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소속 금융사가 매년 매각설에 휘말려 임직원이 동요하는 등 원활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말까지 국회과행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 위헌소지 경제법령 개선

우리 헌법은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하위 관련법령들은 이러한 헌법이념에 맞게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위헌적 경제법령 현황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5월 7일 위헌법령개선 T/F를 발족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운영하였다. 10월 21일에는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

지주회사 규제완화 주요 내용	
내 용	개선이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집단의 형평성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집단은 금융사 보유에 제한 없음,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자회사 보유 가능</li> </ul> </li> <li>• 금융사를 보유한 일반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유인 제고</li> </ul>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자회사 수준으로 완화(상장 20%, 비상장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손회사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별도법인 설립의 장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손회사 지분율 100% 소유 의무로 증손회사 단계에서의 합작투자 불가능</li> <li>- 지분율 규제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책임경영, 위험분산의 장점 활용 어려움</li> </ul> </li> </ul>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200%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수익률보다 은행대출금리가 높아 차입 통한 계열사 확장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기업대출이자율 7.17%, 배당수익률 2.58%, 2009년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 46.4%(2008년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123.23%)</li> </ul> </li> <li>• 자회사 주식가액 변화에 따라 부채비율이 변동되는 불확실성 해소</li> </ul>
비계열사 주식소유한도 5%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서 정부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참여 지원토록 규정</li> </ul> </li> <li>• 점진적 투자로 신규사업 진출 시 리스크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같이 리스크가 큰 사업은 점진적인 투자 필요</li> </ul> </li> <li>• 주식투자를 통한 기업의 여유자금 관리 및 수익구조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계열사 투자는 대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재무적 투자</li> </ul> </li> </ul>

위헌소지 경제법령 개선 회의 및 세미나		
구분	일 자	안 건
1차	5.7(목)	위헌소지 경제법령 T/F 발족 및 운영방안
2차	6.29(월)	노동법제, 방송법제 연구
3차	7.27(월)	회사법제, 공정거래법제 연구
4차	8.10(월)	세제, 토지·건설·환경법제 연구
5차	8.31(월)	감수 및 종합정리
세미나	10.21(수)	관계, 학계, 법조계, 실무진 등 140여 명 참석
6차	12.17(목)	최종 검토



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부와 기업,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4개 법령 114개 조문에 대해 위헌성을 찾아내 관계부처에 건의하였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과세 등 특수관계인규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규정, 지주회사 등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비정규직 기한제한 규정, 대기업을 방송사 투자제한 7개 분야에서 위헌성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재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관련자료를 검토 중이다.

### 기업집단 공시제도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경련은 이 제도가 기존 공정거래법의 공시제도와 중복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일부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사전적 규제사항이 아니고 공시 자체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와 사전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설득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되게 하였다.

당초에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전체가 개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개별공시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및 법적 책임 불투명 등을 이유로 대표회사 공시로 개선하였다. 또 계열사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품용역거래에 대해 당초에는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1년 주기로 공시하도록 공시 주기를 완화하였다. 2009년은 이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 3 기업의 세 부담 경감 및 조세제도 선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원 및 감세기조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세제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원활화와 경쟁국들에 비해 취약한 조세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 세제개편 종합건의 추진

연중 회원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세제개편 종합건의를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정책방향은 조세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걸린 문제이므로 차질 없이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세소득 산정과정에서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어 투자촉진 효과가 확실하고 직접적이므로 일몰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하였다. 셋째, 첨단기술력이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넷째, 공장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기구, 설비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수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섯째,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연장 등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대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R&D 세액공제 확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구조조정 목적 사업 양도차익 과세이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 완화, 공장자동화설비 관세감면 일몰연장,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세제 지원, 틈새 일몰연장 등이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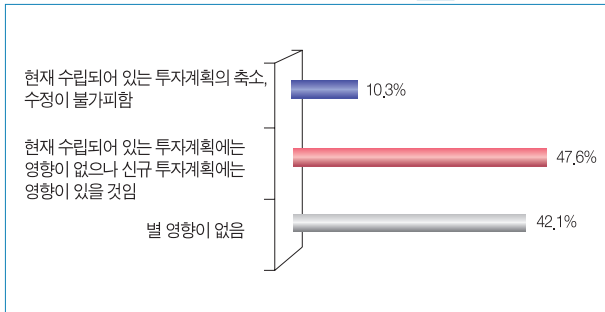
세제 종합건의 및 개별 정책건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2009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조세당국의 입장과 법인세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하여,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였다.

회원사 및 세제실 관계자 간담회(7월), 경제5단체장 지경부장관 간담회(10월), 회장단 총리 간담회(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 간담회(11월) 등을 열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전문가 언론 기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우호적인 여론조성에 힘썼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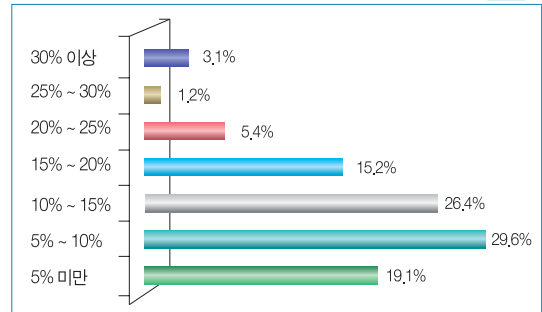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기업의 57.9%가 투자계획을 축소·수정하거나 신규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56%는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5~1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응답기업의 4분의 1 정도는 연간 투자액을 15% 이상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법인세 인하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3%에 달했으며, 법인세 인하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기업도 19.1%나 되었다. 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시 투자계획 영향



※ 자료 : 전경련, 600대 기업 조세현안 실태조사 결과(2009. 11)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시 연간 투자규모 축소율



※ 자료 : 전경련, 600대 기업 조세현안 실태조사 결과(2009. 11)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 개진 결과, 2010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대통령령 개정사항' 을 발표했다.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는 조세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현황, 상속증여세 폐지국가들에 대한 검토,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자본이득과세 개선을 통한 상속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리는 관점에서 상속세제의 운용 틀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자본이득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하지만 상속증여세 합리화는 우리나라 조세체제를 합리적·선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한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변경되어 기존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기업집단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계열사 간 지급보증 금지,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었고, 2009년 하반기부터 기업집단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기업집단공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결합재무제표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 정책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제회계기준과 세법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새로운 회계시스템 구축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촉구하였다.

#### 4 노동관계법 개정 대책

2009년에 비정규직법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포함된 노동조합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복수노조 시행 연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우선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복수노조 시행 연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경제계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보고서 발간, 주요 인사 면담,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동계 반발로 경총, 노동부, 한국노총이 타결한 노·사·정 합의안(12.4)과 달리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상황에 직면하자 노·사·정 합의정신 준수를 촉구하는 경제4단체 성명 발표(12.10), 경제5단체장 여야대표 면담(12.21), 일간지 광고(12.22)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론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결국 복수노조는 교섭노조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의 활동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다.

#####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공론화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對국회 설득 및 비정규직 대상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였다. 사용기간(2년)이 제한되어 비정규직 형태로라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수밖에 없고, 사용기간 제한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실직을 유발함으로써 근로조건 보호 등 공공복리를 침해하므로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권리 또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에 실패하여 사용기간(2년) 제한규정이 시행되었으나, 2010년 이후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작업에 경제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논의기반 조성

2010년 정부의 최우선 핵심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전개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제계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 민·관합동회의(7월), 한나라당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와 간담회(9월) 등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선 과제를 건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가 허용되고 있어 경영전략의 변경이나 구조

## 노동관계법 대책 사업

### 복수노조 전임자 대책

#### •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폐해 집중 부각

##### - 보고서

- ① 복수노조 : 복수노조가 초래할 수 있는 6가지 문제점, 복수노조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사례, 복수노조 허용 선결과제, 노사관계 주한 외투기업인식 조사
- ② 노조전임자 :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 행태, 게임이론으로 본 노조활동 과격화 원인, 노조전임자 비리 실태, 노조전임자 및 노조활동가 경력 유형, 노조전임자 임금 없으면 대한민국 노조 망하는가? Time-off의 문제점, 당장 없어야 할 노조 시위방식 10선, 노동계 파업방식 이대로 좋을까, 주요 기업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

#### • 경제4단체 공동성명(12.10) : 복수노조-전임자에 대한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 • 노사정위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참여, 경제계 입장 대변

#### • 경제5단체 실무협의회 : 노조법 관련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 주요 인사 간담 : 한국노총 위원장(9.27), 노동부장관(8.28, 10.15), 노사정위원회 위원장(9.2) 등

#### • 경제5단체장-지경부장관 간담회(12.19)

#### • 경제5단체장 국회 방문 설득(정몽준 대표, 정세균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12.21)

#### • 노조법 개정 관련 경제5단체 공동 광고(12.22)

#### • 기타 : 환노위 주요 의원실과 정책협의 간담회, 20대 그룹 노무담당 임원회의, 노사정책연구회 등



### 비정규직 대책

#### • 비정규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제시하고 공론화

##### - 보고서 :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 - 설문조사 : 비정규직 대상 비정규직법 개정 의견 조사

#### • 대국회 설득 : 환노위 의원(실) 간담회, 정부-5단체 회의 2회(6.10, 6.19), 환노위 의원 방문 설득(6.5, 6.18), 여야 원내대표단 설득(6.18, 6.19)

#### • 위원문제 등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 부각 및 공론화 : 기획기사(세계일보 등), 경제5단체장 공동기자회견(7.2), 극등방송 좌담회(8.28), 하계포럼(7.31) 등 각종 지상좌담회, 칼럼, 인터뷰 등



조정에 따른 해고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우리나라 파견근로 활용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원칙적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대신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단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이유와 유연성 제고방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홍보하고, 방송 토론 프로그램, 인터뷰 등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성을 역설해 여론을 환기해나갔다. 우리나라가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3,456만 명)의 10%인 약 350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관련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경제교육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의 확산사업, 미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고양사업, 경제계의 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4 시장경제 이념 확산과 사회공헌활동 확대



## 1 경제교육 인프라 선진화 및 기업가정신 고양

### 경제교육 인프라 선진화

경제교육 인프라 선진화를 통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이념 확산을 위해 중고교 경제교과서 집필기준을 제시하고 경제과목 독립 교과목 관철, 교과서검정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보급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 ◎ 경제교과서 집필기준 제시

일선학교 교육현장에서 채택·사용되고 있는 대다수 현행 경제교과서들은 사회와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쳐 교사는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은 배우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흥미 없는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 구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앞으로 도입되는 모든 경제교과서에 적용될 집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계·경제계·노동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집필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를 3회 개최하여 2009년 9월에 경제교과서 집필기준을 최종 마련해 교과부에 전달하였다. 교과부는 12월 17일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각 교과목의 단원구성안을 마련하고 집필기준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집필기준은 경제교과서 집필진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과 좌편향적 이론에 지나치게 치중한 기존의 경제교과서와 달리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이념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해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경제교과서 도입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ree Market • Free Enterprise • Free Competition



### ◎ 경제과목 독립 교과목화 및 친시장적 인사 검정심사위원 선정 유도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을 마련하면서 작년 9월 사회과목에서 일반사회 영역을 기존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과사회 총 4개 과목에서 정치·경제, 사회문화·법 2개 과목으로 통합·축소한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전경련은 '차세대경제교과서' 집필진을 포함한 교육계 및 경제교육 관련 단체 인사들과 연계해 경제 과목 독립 교과목 폐지의 문제점과 독립 교과목 유지의 필요성을 다방면에서 제기하였다. 우선, 서로 이질적인 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할 경우 내용상 유실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상 사회영역의 필요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며, 학습내용의 양적 감축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학문상 공통점이 전혀 없는 두 과목을 한 과목으로 묶으면 학습 및 교육 효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11월 5일 대학교수, 일선교사, 경제교육기관 인사들이 참여해 KDI, 경제학회, 경제교육학회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의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제교과목 독립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세미나 결과를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였다.

그 결과 교과부는 12월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경제과목을 독립 교과목으로 유지하는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교과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교과서검정 심사위원 중 경제교과서 검정심사위원을 추천해 향후 경제교과서 검정심사 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도 마련하였다.

### 미래경제주역 대상의 기업가정신 고양사업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현되는 사회 구현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의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고양사업을 지상파 방송, 정부와 경제단체, 신문사 등과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MBC와 공동으로 '한민족 위기극복 DNA : 기업가정신' 이라는 7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학기간(8~9월)에 방영하였다. 불굴의 도전정신과 창조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우리 선조들의 기업가정신이 후대에 이어져 오늘날 세계적 기업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청소년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시리즈에 총 30여 기업을 소재로 다루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MBC 다큐멘터리 부문 시청률 1위를 차지한 동 프로그램은 영어판으로 번역되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수출될 예정이다.

2009년 기업가정신 주간(10.26~11.8)에는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 경총)와 공동으로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10.26),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11.6), 마라톤(11.7), 도전골든벨(11.8) 등을 개최하여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전경련이 주관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5만 달러 사회로 가는 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교육, 법과 원칙, 기업경영,



사회통합, 과학기술 5개 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100개 팀이 참가하였다. 이 중 10개 팀을 선발해 시상하였고 주요 아이디어를 동아일보에 홍보하여 대학가에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어린이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기업가정신 배우기 캠프’와 ‘기업가정신 배우기 글쓰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경제의 미래인 초등학생이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해 건전한 이해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글쓰기 경연대회에서는 총 28명이 수상했는데, 영상물 부문에서 기업들의 인재경영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느낌을 쓴 어린이 11명과 기업가정신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출품한 17명이 수상했다.

## 2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 추진과 사회공헌 문화 확산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사업으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공헌 연속기획포럼’을 열어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난 10년 간의 사회공헌활동을 되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 내 소외계층 아동,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사업 추진

2008년 11월 회장단회의에서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저출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의 보육지원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사업추진기금 조성,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 BI 확정, 착공식 진행 등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2월 주요 회원사 21개사가 참여하여 2009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 69억 2,300만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했으며, 3~5월에는 전국 200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11개

지자체(서울 은평구, 서울 도봉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수원시, 강화군 삼산면, 경기 오산시, 경북 예천군, 전남 광양시, 제주도 서귀포시)를 선정하였다. 전경련과 사업대상 지자체들은 7월 2일 MOU를 체결하고 2009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보육지원사업을 국민과 소통하는 경제계의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설명칭인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과 로고 등의 BI를 확정하였다. 8월 24일 있었던 '오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착공식'을 필두로 11개 지역에서 어린이집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설사업은 6월 9일 개최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주요 방송 및 일간지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경제계 공동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보육지원사업과 함께 CEO 해피디너, Dream-Up PC 지원사업, 우리 장병에게 책보내기 운동, 저소득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지원 등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추진했다. CEO 해피디너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기업의 CEO들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직접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불우한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시간을 보냈다. 2009년에는 지성하 삼성물산 사장, 김영기 LG전자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 박영주 이진산업 회장,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 등이 CEO 해피디너에 참여하였다. 9월에는 군복무 중 독서활동을 지원해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장병 책보내기 운동'을 출범하였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9월 28일 육군 제15사단에 장서 3,000여 권을 갖춘 병영도서관을 개소하였다.

### 사회공헌을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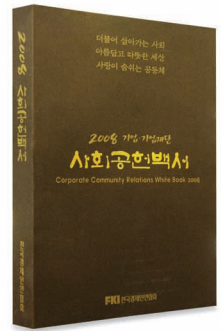
회원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1993년 시작되어 2006년부터 매년 정례 발간되고 있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재단의 사회공헌활동 내용이 망라되어 있는 대표적 국내 자료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는데, 12월에는 『2008년도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가 발간되었다.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4월, 11월)에 걸쳐 '사회공헌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NGO·NPO 관계자를 대상으로 'NGO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특히 'NGO 아카데미'는 경제계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11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오던 '대한민국 사회공헌 문화 대축제'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야외행사 진행이 어렵게 되자 연속포럼, NGO Fair 등으로 대체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기업 사회공헌 10년 회고와 전망(11.25)',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와 언론의 역할(11.27)', '대한민국 사회공헌 CEO 포럼(12.2)' 등으로 구성된 '2009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연속기획 포럼'에는 기업, 시민단체 등 국내 사회공헌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12월 9일에는 NGO 관계자들과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사회공헌 파트너십 사업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행복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Fair'를 개최하였다.

전경련 대학생 사회봉사단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다문화'를 주제로 10개 팀 150여 명의 대학생들이 직접 봉사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self-봉사단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영등포구, 금천구 내 다문화 가정 아동 및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맞이 송편 빚기, 사랑의 쌀 전달, 겨울나기 사랑의 선물상자 제작 등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 3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과 상생협력 정책방향 제시, 중소기업 경영자문과 교육 등을 목표로 2009년 사업을 추진하였다.

#### 상생협력 확산과 상생협력 정책방향 제시

2009년 상생협력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고 상생협력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먼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협력관련 법제·인프라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적 협력의지를 높이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주요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가이드북』을 발간(중기 1,000개사 무료 배포)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안내시스템을 구축(3.26)하였다. 이와 함께 5대 유통업체 임원간담회 개최(2회), 정부건의 등을 통해 SSM 사업조정 관련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 축소에 노력하였다.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하 상생협력촉진법) 등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 10월 발표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납품 단가 조정협의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원칙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조정협의제를 법제화하

도록 건의하였으며(2.5), 원사업자에게는 조정협약제 도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였다. 녹색성장과 관련해 대기업의 저탄소녹색성장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녹색성장 협력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2.25)' 과 '대기업 녹색경영 노하우 전수 세미나(12.21)' 를 공동 개최하였다. 서면계약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아래 원·수급 사업자 14개 단체와 함께 '상생협력 및 서면계약문화 정착 캠페인(5.21)' 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성공사례를 전파해 상생협력의 바람직한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 이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상생협력주간(11.3~7)을 정해 상생협력과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상생협력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제6회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제6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기관 등 총 58개 기업에서 68건을 응모했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협력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게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29점을 포상하였다.

단체표창에서는 현대기아차·하이닉스·모토닉·대원인물이 대통령 표창을, 남동발전·롯데호텔·한국원자력연료·탑금속·대동중공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17개사가 수상하였다. 개인표창으로는 박명길 포스코 상무(대기업)와 최재원 달성 사장(중소기업)이 동탑산업훈장을, 김상도 파워넷 사장과 허기복 삼우기계 사장(중소기업)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수상내용 중 대·중소기업 협력 우수사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성과공유 우수사례 등을 분야별로 발표하는 상생협력 모범사례 설명회(11.5)를 개최하였다.

'세계시장의 재편전망과 상생협력의 발전방향' 을 주제로 200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12.9)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에는 윌리엄 바넷 스탠퍼드 대학 교수, 정준양 포스코 회장, 중국 인민은행 쑤닝 부행장, 일본 도레이 사의 사카키바라 사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위기 이후 세계시장 재편과 각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형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 한국형 중소기업의 발굴·성장 전략, 납품가격 결정구조 사례연구 등 상생협력 관련 주요 주제를 연구해 상생협력의 이론적 기틀을 강화하였다.

#### 대기업의 상생협력기반 조성 및 협력활동 지원

한편, 주요 대기업의 상생협력기반 조성 및 협력활동을 지원하였다. '30대 그룹 상생협력임원협의회' 를 운영하여 주요 그룹의 협력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고위 공직자를 초청하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기업계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협력사례를 공유하였다. 개별기업의 상생협력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워크숍(10.16), 삼성전자 상생페스티벌(11.20), 현대자동차 R&D Tech-Day(11.10),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11.3), 롯데건설 베스트 파트너스 컨퍼런스(4.28) 등 주요 대기업의 상생협력활동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009년에도 2회(4.14, 9.16)에 걸쳐 상생경영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들 교육과정에서 대기업 및 1차 협력사의 구매부서 실무진을 대상으로 상생경영전략, 대·중소기업협력정책 등을 교육하고 상생협력활동이 기업의 실무자 선까지 확산되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 경영자문과 교육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문과 교육사업을 꾸준히 확대·시행하였다. 센터 내 대기업 전직 CEO 및 임원 9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하 자문단)은 중소기업에 무료경영자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4년 7월 27일 설립되었다. 2009년에 자문한 중소기업 업체 수는 신청기업 773개사, 자문건수 1,533건으로 2008년 대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문형태도 다양해졌다. 자문단의 자문활동이 모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기업, 협력업체, 자문단 3자가 참여하는 경영닥터제를 적극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경영닥터제에는 삼성전자, LG전자, KT, 신세계 등 대표적 대기업 13개사와 협력업체 24개사가 참여하여 2008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자문위원이 비상근고문 형태로 6~12개월 이내에 중·장기적인 경영자문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멘토링은 27개사를 자문하였다. 경영자문상담회는 자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009년 3월 강원상담회(3.26)를 시작으로 부산(4.6), 서울(5.28, 7.8, 7.24, 9.29, 10.9), 경기(6.4), 충북(11.27) 등에서 총 9회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지식을 주제로, 자문위원이 강사가 되어 현장경험과 경영노하우가 살아 있는 중소기업 혁신스쿨을 상반기(4.28~29)와 하반기(10.21~22)에 2회 실시하였으며,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방 중소기업이 요청한 주제에 따라 자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식을 전수하는 맞춤형 교육을 19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FTA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민간경제협력과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 지원에 적극 나섰다.

## 5 민간경제협력 강화 및 기업의 해외경영활동 지원



## 1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및 기업의 글로벌 경영애로 타개

###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글로벌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FTA 관련사업 추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FTA 관련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우선, 한·미 FTA와 한·EU FTA 등 주요국과의 FT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방문건의와 전문가 주요 일간지 기고를 추진하였다. 2월 18일과 2월 20일에는 경제4단체 상근부회장단이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간사, 자유선진당 박선영 간사를 방문하여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동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2월 24일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이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 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방문하여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11월 18일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박진 외통위원장 및 김충환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를 방문하여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EU FTA 비준안 제출 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FTA 민간대책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주최로 추진된 'FTA 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를 후원하였으며, 3월 13일과 10월 27일 개최된 제16~17차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한·EU FTA 가서명 환영 및 기서명 FTA 비준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2009년 FTA 추진계획 및 주요 FTA 협상동향, 한·EU 및 한·인도 FTA 활용전략, FTA 추진 관련 홍보 및 지원방안, 한·미 FTA 대미 홍보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고, 미국 현지에서 영업 중인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 명의로 지역구 연방 상·하의원에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 주요국과의 조속한 FTA 발효 및 기업경영애로 개선 건의내용 요약

건의내용	건의대상
한·인도 CEPA 비준감사와 한·미/한·EU FTA 비준 협조요청 (경제5단체장 국회 방문)	국회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자유선진당 총재 및 외통위 위원장 면담(11.18)
한·미 FTA 비준 촉구(경제6단체장 국회 양당 대표 방문/성명서 및 기자회견 병행추진)	국회 여야 양당대표 면담(2.24)
한·미 FTA의 조기비준 동의가 필요함(경제4단체 상근부회장 국회 외통위 방문)	국회 외통위원장 및 양당 간사 면담(2.18, 2.20)
아세안 주요 국가와 개별 FTA 추진/FTA 전문 컨설턴트 육성 관련 정책건의	기획재정부(7.22), 외교통상부(11.18)
김포-베이징 노선의 신속한 개설 건의	국토해양부 실무건의(8.21)



### 다자협의기구 참여를 통한 보호주의 저지와 글로벌 경영활동 원활화 노력

다자협의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원활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우선 G20 런던 정상회의(4.2)에 앞서 개최된 G20 런던 비즈니스 서밋(3.18)에 조석래 회장이 참석해 세계 경기부양 공조와 보호주의 확대저지 및 개도국 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는 영국 정부에서 고든 브라운 총리, 기업·규제개혁 장관 만델슨 경 외에 관련 장관 6명이 참석하였으며, G20 국가의 경제계에서는 조석래 회장과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그리고 혼다 게이이치 BIAC Japan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월 12일~14일 개최된 싱가포르 APEC CEO 서밋에는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고위 기업인 24명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해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저지하고 아태지역 교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국 정부에 보호주의 저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는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의 요청에도 협조하였다. 우리측도 한국 ABAC 위원 3인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께 보호주의 저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였다.

### 국제협력위·글로벌경영협의회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경영애로 해소 지원

국제협력위원회와 글로벌경영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지역연구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였다. 우선, 6월 4일 개최된 국제협력위원회에는 외교부의 안호영 조정관을 초청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현지에서 겪는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면 동남아 개별국과의 FTA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FTA 협상 우선국가 선정 시 경쟁국과의 관계 및 잠재시장규모를 고려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글로벌경영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였는데, 협의회에서는 반덤핑 제소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를 지원해줄 것과 관세청의 종합인증 우수업체 시범사업기간 연장 그리고 기업의 해외생산기지 피제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신흥시장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출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기업의 관련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연구회 사업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3월 12일 개최한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노무문제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3%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인도의 노무현황과 우리 기업의 대응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6월 11일에는 '미얀마의 변화 가능성과 투자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여 풍부한 자원과 저임 노동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온 미얀마의 최근 정치체제 변화 및 투자여건 개선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9월 30일에는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인도 지역연구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교역투자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2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현지 경영애로 해소

### 대통령의 녹색성장·자원에너지 경제외교에 맞춘 맞춤형 경제사절단 파견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연계하여, 자원확보와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관 공동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대통령의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미국, 스웨덴 순방 시 전경련 회장단 등 경제계 대표인사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하여 녹색성장·자원에너지 등 대통령의 한국 세일즈 경제외교를 지원하고 각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민간경제외교활동을 펼쳤다.

오스트레일리아(3.4~6, 시드니·캔버라)에서는 '한·오스트레일리아 그린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오스트레일리아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대형 건설프로젝트 및 그린에너지 분야 진출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오스트레일리아 방문기간에 한국광물자원공사, (주)한화, 선메탈사(고려아연 자회사) 간에 오스트레일리아 볼리아 동·아연광산 탐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 조인식을 하고 전략 광종인 동·아연에서의 對오스트레일리아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한·오스트레일리아 양국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FTA 조속 체결을 건의하여 대통령 방문기간중 양국 정부가 한·오스트레일리아 FTA 협상 착수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카자흐스탄(5.12~14, 아스타나)에서는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건설·플랜트, IT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통령 체류기간에만 카자흐



스탄 이러닝(e-learning) 구축, 오일탱커 건조, 조선소·철도 건설, 일반건설 사업 참여를 비롯해 총 5건의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6.15~16, 워싱턴 DC)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통령과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CEO Round Table에서 한국측은 한국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미국 기업인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경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을 방문하여 한·미 FTA 비준에 미 행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등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스웨덴(7.13, 스톡홀름)에서는 ‘한·스웨덴 지속발전 경제인회의 및 CEO 간담회’를 열어 한·스웨덴 비즈니스 협력과제를 점검하고 KT와 Ericsson 간 IT 부문 협력, 포스코건설의 벡터스(무인택시) 사업 등 양국의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확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우리 기업의 신흥개도국 진출여건 개선

우리 수출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통적 경제협력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는 기술분야 중심으로 질적 심화를 모색하였고, 우리 기업의 중·중·중 아시아, 아세안, 인도 등 신흥개도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전개하였다.

먼저, 중·중·중 아시아 진출협회의체인 ‘뉴실크로드협의회’를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11월 19일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데 비해 공공부문의 지원체제는 매우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협의회는 2010년부터 시장조사단 파견, 정보수집·공유시스템 구축, 지역연구, 코리아 프렌들리 이미지 업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12월 초에는 중·중·중 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 차관급 이상 정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초청하여 ‘제2차 중·중·중 아 투자포럼’을 지식경제부, 상공회의소,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최근 중·중·중 아시아 투자환경과 유망 투자프로젝트를 관심기업들에게 소개하였다.

신흥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및 유망사업·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와 네트워킹 사업도 병행해 실시하였다.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인도, 미얀마, 중국 등 기업의 우선 관심국가 위주로 모두 7차례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최근 투자정보와 시장정보를 제공하였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신흥개도국의 고위 공무원, 차세대 지도자와 관심기업 임직원과 네트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카자흐스탄 무하노프 전략연구분석센터 소장(6.9), 베트남 리딩안 사회경제정보예측센터 원장(9.3), 인도 아제 산카 상공부 차관, 카자흐스탄 카즈바야프 통상위원회 위원장(12.2), 몽골 도지사 일행(12.8), 나이지리아·말리·카메룬의 차세대지도자 등을 초청하여 해당국가의 최근 비즈니스 환경과 유망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중남

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3월 1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콜롬비아경제인연합회(ANDI)와 경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콜롬비아와는 FTA 체결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 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프리카의 자원부국인 알제리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5월 26일 알제리 기업연합회(FCE)와 MOU를 체결하였다.

### 3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주요 전략국과 경제협력 확대

#### 코리아 나이트, WEF 동아시아포럼 개최

WEF 다보스포럼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코리아 나이트(Korea Night)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경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코리아 나이트 행사는 '미소를 통한 소통'을 주제로 동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전통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매력 있는 나라 '한국'을 알려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목적으로 SK그룹 후원으로 범경제계 차원에서 준비하였다.

1월 29일 스위스 다보스 샬라프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조석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장,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피터 샌즈 스탠더드 차터드그룹 회장, 맥다니엘 무디스 회장, 스미스 뉴스위크 회장 등 정·재계 거물 글로벌 리더 214명이 참석하여 WEF 기간에 열린 국가브랜드 행사 중 최고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영상메시지에서 기업친화적인 한국의 기업환경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6월에는 서울 '2009 WEF 동아시아포럼(WEF on East Asia 2009)'을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기회복세를 보인 한국 경제와 기업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 브랜드 알리기 장'으로 활용하였다. 조석래 회장은 서울 포럼 한국 의장으로 참가해 6월 18일 Korea Lunch 특별 세션에서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View from Seoul'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운용에 큰 잘못이 없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조 회장은 동아시아 경제가 앞으로 대외요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 및 실물부문에 과도한 대외 의존성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① AMF(Asian



Monetary Fund) 설립을 통한 역내 유동성 지원체제 강화, ② 역내 채권시장 육성, ③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 등을 주창하였다.

**미국·일본·중국 등 핵심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강화**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과 연중 경제협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미국과는 6월 대통령 방미 시 경제사절단을 파견한 데 이어 11월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제2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하였다.

11월 5-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2차 총회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회장단과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안병모 기아차 사장, 김인철 LG생명과학 사장 등 주요 그룹 대표로 구성된 한미재계회의 위원 22명이 참석하였다. 제22차 총회에서는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산업분야별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에너지 및 의약의료 분야를 우선과제로 채택하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K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신규 위원을 영입하고 코펜하겐 UN기후변화협약에서 논의된 대로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등과 관련해 경제계의 대책을 논의하고, 스마트 그리드 등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 의약·의료 분야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에서 신규 위원을 영입하고,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미국 환자 유치방안과 바이오산업 및 임상실험 등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개최되었고 경제계 숙원사업인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론 커크(Ron Kirk) USTR 대표, 데니스 하이타워(Denise Hightower) 상무부 부장관,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의원 등을 총회 연사로 초청하여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된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 산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해 청취하고 미국 정부가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일본과 양자 회의는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회장단만이 참석하는 한일재계회의 대신 한일 정상외교의 주막



####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문(10.10, 베이징)

1.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아래에서 아시아의 주요국인 한·중·일 3국 경제계는 협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아시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 3국 재계는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위기 이전 교역규모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
3. 3국 재계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3국 정부가 동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 기반 확충, 역내 금융 협력 강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4. 3국 재계는 에너지, 환경보호 등 주요 협력분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5. 3국 단체는 한·중·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노력하며, 내년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국에서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다.

서틀회담과 병행하여 ‘한일경제인 간담회’ 형태로 두 차례 개최하였다. 1월 11일 당시 아소 타로(麻生太郎) 일본 총리 한국 방문 때 열린 ‘한일경제인 신년간담회’에서는 2008년 두 차례 열린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양국 경제계가 합의한 투자촉진협의기관 설치, 대한투자조사단 파견 등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양국 정상 간담회에서 두 나라 경제계 수뇌는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정부레벨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 정상에게 개진하였다.

6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도쿄에서 ‘한일경제인 간담회’를 열고 ‘한일 경제협력의 과제’, ‘저탄소·녹색성장 협력’, ‘부품소재 협력’, ‘한·일 FTA 교섭 재개’, 관광·인적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현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경제계에 ①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아시아금융센터(Asian Financial Center for Research & Training)’ 설립·운영, ②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강화, ③ 양국 중소기업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가업승계 관련 다양한 정보 교환, 가업승계 우수사례 공유 및 지원프로그램 공동개발, ④ 한·일 FTA에 대해서는 양국이 열린 자세로 상호 이해와 윈윈 정신에 입각한 전향적 논의를 협력과제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양국 경제인들은 한·일 FTA, 녹색성장,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역할을 양국 정상에게 공동으로 건의하였다.

10월 10일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추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CCPIT),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계는 에너지, 환경보호 등을 주요 협력분야로 삼고, 인적·기술적 교류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금융위기 교역규모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저지 노력, 한·중·일 FTA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3국 경제계의 공식 요청에 대해 한·중·일 정상은 한·

중·일 FTA를 추진하기 위한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2010년 상반기 착수’ 와 에너지, 환경보호, 인적·기술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는 중국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서울에서 제5차 한중재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철강·석유화학, 물류, 조선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대한민국 투자모델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5월 상하이엑스포 개막에 맞추어 열리는 ‘제6차 한중재계회의’ 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8월 전통적 우방국인 대만이 50년 만에 겪은 기상재해, 태풍 ‘모라꼿’ 으로 160명 사망, 490명 실종, 경제 손실규모 150억 대만달러(한화 5,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자 태풍 ‘모라꼿’ 구호성금 30만 달러(한화 약 3.7억 원)를 대만 국제경제협력협회(CIECA)에 긴급 전달하였다.

### 독일, 대만, 노르웨이 등 주요국과 전략적 경제협력 추진

1970~80년대 경제개발 초기 산업협력이 활발했던 독일, 노르웨이 등 기술선진국 및 대만과의 경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4월에는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 우리나라가 동반 국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독일경제인연합회(BDI)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열린 한·독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양국 경제인들은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산업 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독일의 원천기술력과 우리나라의 응용기술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는 두산, 효성 등 우리 기업의 홍보관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조석래 회장은 독일경제인연합회 CEO들로 구성된 FTC(Foreign Trade Committee)에 참석하여 한·EU FTA의 중요성과 관세환급 문제를 설명하고, 독일 기업인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9월에는 서울에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대만과 제34차 한·대만 경험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의료관광, 해운,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증진방



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일본-대만 항로에 대한 한국 선사의 참여제한 폐지를 대만 측에 촉구하였다.

10월에는 부산에서 제18차 한·노르웨이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과 조선,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환경과 관련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노르웨이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 관련 기술에 관심을 표명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회관 신축설계와 구회관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신축자금 차입계약이 체결되면서 향후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에는 20개의 회원사가 신규 가입을 신청하면서 회원사가 총 484개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6 회관신축 및 회원사 모임 활성화



## 1 회관신축

### 설 계

연초 세계 유수의 설계업체들을 대상으로 초고층 오피스 설계 경험과 디자인 경향 등을 검토한 후 Pei Cobb Freed & Partners, Adrian Smith & Gordon Gill(ASGG), Foster & Partners 3개사를 지명하여 설계경기를 진행하였다. 2009년 1월 6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한 Owner's Requirement를 전달하였고 3월 20~21일 양일 간에 걸쳐 접수된 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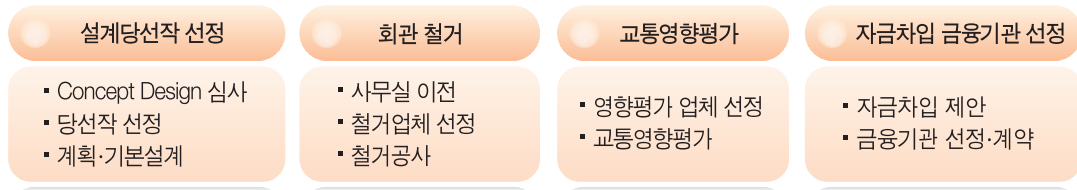
3개사의 개념설계안을 놓고 건설위원회 위원, 전문가들로 위촉된 심사위원 및 관련 설계업체의 의견과 회관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 검토한 결과 4월 8일에 ASGG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ASGG사의 설계안은 지상 50층, 지하 6층에 연면적 약 17만㎡ 규모로 전면에 248m 높이의 직육면체형 타워부를 두고 측면에 회의시설이 들어설 포디움을 3층 높이의 타원모양으로 배치하여 직선과 곡선을 입체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건물외벽을 주름지게 처리해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자연 채광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건물외벽과 옥상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BIPV)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도모한 친환경 녹색건물을 지향하였다.

해외 설계업체가 결정된 후 기본설계 일부와 실시설계를 담당할 국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창조건축이 국내 설계사로 선정되었다.

부분별로 설계를 담당할 협력사(Consultant)도 해외와 국내 모두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업체들이 선정되었는데, 구조는 Thornton Tomasetti와 동양구조, 기계·전기는 ESD와 한일MEC, 토목은 V3와 진영ENC, 소방방재는 RJA와 한방유비스, 조경은 SWA와 동심원이 맡게 되었다.





6월 15일에는 Kick off Meeting이 ASGG가 위치한 시카고에서 있었고 이후 서울에서는 계획설계 30%, 계획설계 100%, 기본설계 100% 회의를, 시카고에서는 계획설계 60%, 기본설계 50% 회의를 각각 개최하였다. 또한 수시로 국제 전화회의 시스템인 Go To Meet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조율하면서 각 설계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설계가 끝나고 기본설계 단계로 접어들면서 인허가 준비도 함께 진행하였다. 건축허가는 21층 이상 혹은 연면적 10만 m<sup>2</sup> 이상인 경우 서울시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신축회관은 이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8월에는 서울시에서 새로이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신축회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12월 말 현재 교통부문에서는 건물신축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 환경부문에서는 탄소발생량 감축 대책, 건축부문에서는 공개공지 개념을 살린 조정설계 등이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보완작업이 진행되었다.

### 구회관 철거

2008년 말까지 입주사가 모두 이전하고 지하상가 임차인들도 퇴거하였으며, 2009년 1월 중순에 전경련 사무국이 인근 KT빌딩으로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구회관 철거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철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월 2일 입찰공고를 내고 2월 9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설명회에는 1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10층 이상 건물 철거실적이 있는 8개 업체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뒤 입찰을 실시해 성도건설이 철거공사를 시행할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신축회관 개요(2009년 말 기준)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사업면적	12,146㎡(3,674평)	
건축면적	6,074.35㎡	
연 면 적	167,334.22㎡(50,618.6평)	
지 상	113,810.45㎡	
지 하	53,523.76㎡	
건 폐 율	50.01%	
용 적 륜	937.02%	
구 조	지 상	철근 콘크리트 코어 벽체, 철근 콘크리트 기둥, 철골보, 아웃리거
	지 하	철근 콘크리트 기둥, 철근 콘크리트보
총 수	지상 50층, 지하 6층	
건물높이	247.56m	
주차대수	633대	



철거공사는 공사현장 외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건물 전체를 매직패널로 둘러싸고 내부마감재와 덕트 및 배관류를 제거한 뒤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공사 과정에서 덕트 및 배관의 이음새 부분을 비롯하여 당초 석면지도에 양이 명시되지 않은 석면이 발견되었으나 철거공사는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시기에 발견된 석면은 관련 처리규정에 입각해 전량 안전하게 제거했다. 해체된 석면량은 천장재가 2,130㎡, 벽체가 4,420㎡, 덕트 이음새 약 8,000개소, 배관 이음새 약 800개소, 석면포 16개소로 제거작업에만 2개월이 소요되었다.

구조물 철거에는 지상에 470톤 크레인을 설치하여 인양과 하역을 담당하게 하였고 지상 20층부터 차례로 슬라브와 기둥을 압쇄하고 H빔과 철근은 절단하면서 순차적으로 지상 4층까지 철거하는 공법으로 진행하였다. 지상 3층부터 1층까지는 크리셔 6대를 동원하여 3개층을 동시에 압쇄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지상층 철거과정에서 부산물(고철 및 비철금속)이 대량 발생해 이를 제철소 등에 직접 매각함으로써 24억여 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지하층 철거는 본공사 공법이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구조체 중 여의대로와 광장아파트 방향은 벽체를 유지시킨 채 어스앵카로 지탱하고 금융감독원과 KT빌딩 방향은 법면처리를 한 뒤 슬래브와 벽체를 차례로 해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지하층 철거 및 되메우기 공사는 9월 30일 현장설명회, 10월 13일 입찰을 통해 삼보ENC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12월 말 기준 구조물 철거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2 회원사 의견 수렴 및 모임 활성화

2008년 신규 가입 50개사에 이어 2009년에는 20개사가 신규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회원 수가 총 484개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회원사를 수시로 직접 방문해 개별 면담을 하고 기업별 경영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사무국 임직원과 공유하면서 애로 해소에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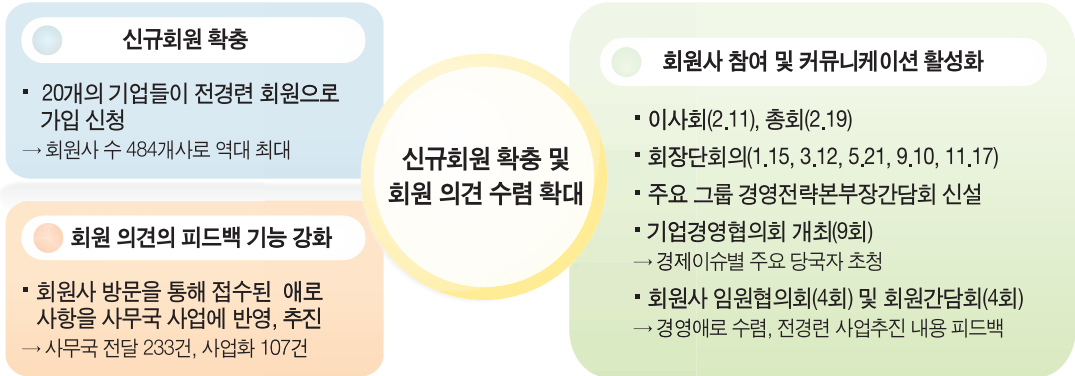
회장단회의, 회원간담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원사 임원협의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가동해 회원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힘썼다. 예년보다 참석률이 높았던 회장단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하여 회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였다.

제48회 정기총회(2.19)에서 제32대 전경련 회장으로 조석래 회장이 재선임되었으며 허창수 GS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회장단으로 선임되었다. 윤석금 웅진홀딩스 회장, 대림코퍼레이션 기의석 사장이 상임이사로, 구자열 LS전선 회장, 제환석 코오롱Fnc 부회장이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신임감사에는 이영관 도레이 새한 사장이 선임되었다.

주요 그룹 경영전략본부장 간담회를 신규로 개최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는 본부장과 사무국 운영 및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무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경제현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초청하여 주요 기업의 기획 및 재무담당 임원으로 구성된 기업경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의견을 정책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책입안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기업경영협의회와 회원 간담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회원사를 대상으로 회원사 임원협의회를 운영했다. 동 회의에는 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초청하여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애로를 건의했다. 또 월간 전경련, FKI 뉴스레터, Issue paper, 경제정책정보, 기업정책정보, 산업정보, FTA정보, CSR-Briefs, 글로벌경영정보 등 각종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전 회원사 대상 회직별(이사), 업종별(건설·조선·해운), 일반회원, 신규회원사 대표 초청 회원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경영애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회의 사업 추진내용을 검토하여 피드백 하





는 등 회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였다.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기업인 특별사면 청원서 제출을 추진하였으며, 전경련 활동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제고하고, 회원에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사 간부 초청 국내 산업시찰, 회원사 임·부서장 초청 연수단 파견 등을 실시하였다. 회원사 창립기념일이나 주요 회원의 애경사에 신속히 경조 조치하여 회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